

< 민원 질의회신집 작성 방법 >

1. 민원 질의회신집 기초자료

- 1)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04~2017.4)
- 2)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 3) 국민신문고 (==URL)
검색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 4) 환경부 ==URL
- 5) 행안부 내고장 알리미 ==URL
- 6) 관리기관 보유자료 (환경부, 한강청, 경기도, 팔당 7개 시군)

2. 수록방법

- 1) 상수원관리지역 법규 별로 질의회신 사항을 수록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2) 지역지구별로는 규제 법규 조항에 따라 수록 (주요 법규 수록)
- 3) 민원 답변기관과 답변일 수록
- 4) 질의회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 및 오류 수정을 위해 편집 후 게재

3. 기타사항

- 1) 최근 5개년 (2016~2020) 간의 질의회신 자료를 중심으로 수록
- 2) 그 이전의 내용이라도 중요한 사항의 경우는 포함
- 3) 관련 민원 질의회신집은 특수협 홈페이지에 게재
(== 파일 링크를 간략하게 추가)

< 1부. 수도법규 관련 민원 >

[1]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 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첩규제 적용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첩으로 지정된 경우, 중첩구역에서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에는 허가 가능하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법으로 규제함이 타당한지요?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첩으로 지정된 경우 중첩구역에서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에는 허가 가능하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법으로 규제함이 타당한 지”로 이해됩니다.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허가행위 및 신고행위로 구분하여 행위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서 허가가 가능한 행위이나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부적합한 행위일 경우에는 행위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2.03, 국민신문고)

2)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등록 건

<질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서 000을 운영 중인 000입니다.

현 부지는 1990년 1월 22일부로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되어 000이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었습니다. 1996년 5월 14일에 법원경매를 통하여 당사가 매입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첨부 참조) 참고로 봉촌리 일대는 2010년 10월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공장등록증’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금융권의 요청에 서류를 신청하였으나, ‘현 공장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매로 매입 시에도 당연히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 회사가 공장을 운영 중이었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도 현부지에서 ‘업태’를 ‘제조’로 하였었는데 당시도 공장등록을 하라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공장등록이란 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관공서나 금융권, 거래처 그 어디에서도 ‘공장등록증’을 제출하라는 소리도 없었고 당사 또한 그런 서류가 존재하는 지도 몰랐습니다. 공장등록을 신청 하니 군청 담당자는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신규로 공장등록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규가 아니라 인지하지 못해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이십 년 넘는 세월을 가동해온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이제 와서 공장등록이 안 된다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사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재활용 원지를 가공하여 공산품(지관)을 만드는 친환경기업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명목으로 등록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장용지에서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공장등록이 늦었다고 등록이 안 된다는 건 너무 행정편의주의는 아닌지요? 각종 세금만 꼬박꼬박 징수할게 아니라 세금징수 이전에 ‘이런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알려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요? 행정기관에서 고지 후 당사가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언급이 없던 문제가 이제 와서 안된다니 납득이 안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2010년 11월 경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관청은 지정 전에 구역을 검토하여 당사와 같은 경우의 공장이나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여 작금과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를 했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공장등록증’이란 서류 한 장 때문에 이십년 넘는 세월을 성실히 살아온 기업인에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제조업의 공장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신규 시설물 등의 설치 (설립)에 따른 규제사항이며 행정절차에 따른 등록절차를 규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제조업 (보호구역 지정 전에 기 허가받은 범위 내의 운영)의 공장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는 동 규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0.10, 국민신문고)

3)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진위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평택만이 할 수 있는 이유?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권자는 송탄 취수장 위치 지역의 자치단체장 (평택시장)이며, 보호구역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로써 경기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권자 (평택시장)가 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및 환경부 승인 등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 개발 범위?

-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금지·제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한 (공장설립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 우리 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1.57 km² (평택시 2.29 km²) : 대부분의 개발 불가

※ 우리시 공장설립 제한지역 면적 62.86 km² : 공장 (제조장) 외 개발 가능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용인시청 환경과, 2020.03.18, 국민신문고)

4) 선동 둔치 체육시설 근처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내용은 “한강 내 불법 어로행위 단속 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문의하신 미사동 (선동 둔치) 인근 한강 본류 하천구간은 한강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팔당댐과 잠실 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해당되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준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어로행위, 수영 등)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나. 귀하께서 언급한 선동 둔치 일대는 잉어 산란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산란철인 요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순찰을 주·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인근 구간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어로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2020.04.21, 국민신문고)

[2] 수도법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취수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상수원보호구역 내 즉석식품 제조 (건강원) 가공업 인허가

<질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전 5월에 경기도 안양시에서 충북 보은군으로 귀촌을 한 사람입니다. 고향을 두고 농촌지역으로 귀촌을 하기 위해 10년이라는 계획을 세워 집사람과 같이 운영하던 건강원과 미용실을 접고 이곳 보은에 작은집에 미용실과 건강원을 운영하며 살려고 집을 신축하여 이사를 왔습니다.

집의 준공을 취득함과 동시에 생업을 유지하려 군청에 미용실을 사업자 등록과 영업신고를 마치고 건강원 신고를 하려하는데 건강원의 업종 분류가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법의 조항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3 km 이내에서는 영업을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는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담당직원분의 결과에는 공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민원을 올리는 부분은 건강원의 규모는 중탕기 5대 정도의 규모고 직원 없는 15평 정도의 공간에서 혼자서 생계형으로 운영을 하는 업종에 제조공장으로 간주하는 부분 하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부분에 법적인 해석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강원이라는 업종이 폐수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동물 취급도 안하고 과일즙만 중탕을 하는데 단지 업종 분류에서 제조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고 허가를 안내주면 보이지 않게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허가신청지역은 오폐수가 별도의 관로가 설치되어 분리되어 배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직원의 구체적인 답변은 화재 시 발생하는 공해물질 때문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화재가 매 달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조항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적 조항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시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이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니 귀촌에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왔음에도 실의에 빠지는 많은 국민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안양시에서는 근린생활 지역이면 인허가가 나오는 업종입니다. 보은도 같은 조건임에도 중탕기 5대를 공장시설로 보고 제조라는 업종 분류 때문에 혼자 하는 업종을 공장제조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생업이 없어 귀촌한지 2개월째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로 다사 갈 수도 없고 보은군에서 생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부디 이점 고려하시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권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규정상의 공장이란 수도권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이고 해당업종이 상기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7.07.04, 국민신문고)

6)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질의 사항>

<질의내용 관련법>

수도법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우리 군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군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제7조의2 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0월 경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의 토지조서와 지형도면을 배부 받아 현재까지 공장 인·허가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 3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시설의 경우 우리 군 지역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취수시설이 위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공장 설립 관련 협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이 지정근거가 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그 지역과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보호구역이 속하는 지자체장과 협의토록 한 것은 공장설립 승인 시 상수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3, 보호구역 없이 취수시설만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의 협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수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가능한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1.25, 국민신문고)

7)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공장등록과 관련된 질의

<질의 사항>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이 등록취소 후 동일 소재지 같은 건물에 사업장명과 대표자를 달리하여 같은 업종의 공장 (용접기 제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이를 신규 공장등록사항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도권 시행령 부칙 (제22506호) 제5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항>

1. 수도권 시행령 부칙 (제22506호, 2010.11.26) 제5조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1) 2010년 11월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등 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등 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2. 이 때 “이미 설립된 공장”이란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 시행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도권 시행령 개정 (2010.11.26)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이후 등록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으로 인정함 (최초 공장설립 이후 기타 용도로의 변경 없이 계속 공장용도인 조건에 한함)

- 이 경우 기 등록된 면적 (공장등록증), 기 허가받은 수질오염배출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폐수 배출량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범위 내로 한정함

3. 수도권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3조의 규정은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이미 설립된 기존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12.27)

8)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의 입지

<질의 사항>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공장 입지 가능 여부.

<답변 사항>

1. 수도권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산집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장설립제한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2개 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걸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한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9.23)

9)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

<질의 사항>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오폐수 미배출 공장 등을 포함한 모든 공장에 대하여 공장의 준수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은 업종, 원료, 제품, 제조공정, 오폐수 배출 유형, 수질오염사고 유형, 공공하수도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완충저류시설,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준수사항 중, 완충저류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오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허가기관 판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3. 다만 오염사고에 대비한 오폐수 외부유출 차단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제품의 제조 등의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 부원료, 첨가물 등의 보관, 이송과정에서 사고로 유출되거나 누출될 수 있으므로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05.19)

10)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질의

<질의 사항>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2001년 신축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을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공장설립제한제도 시행일 (2010.11.26) 당시 이미 설립된 공장은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22506호, 2010.11.26)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 가능하며,
2. 공장부지에 건축물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업종 변경도 없는 공장건축물의 재건축은 공장의 설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에 제한이 없습니다.
3. 다만,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인 것만으로는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공장등록일이 2010.11.26. 이전인지 또는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공장은 2010.11.26. 이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허가 시에 확인 가능한 공부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06.09.)

11)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 관련

<질의 사항>

업종이 물 사용과 관련이 없고 (단순 부품조립 등) 제조공정상 오수 및 폐수발생이 전혀 없을 때 준수사항 (집수시설 등) 적용 여부

- 오수에 제조공정과 관련 없는 생활오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하수처리 內 지역과 하수처리 外 지역에 따른 공장의 준수사항 집행 여부

<답변 사항>

1.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제품의 제조 등의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 부원료, 첨가물 등이 보관, 이송과정에서 사고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폐수·오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오폐수 발생이 전혀 없고, 액상의 원료 또는 연료물질 사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집수시설 설치 등의 준수사항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3. 공장의 범위는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공장의 부대시설도 포함되므로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수질사고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함.
4. 오수가 공공하수도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라면 허가권자는 공공하수도 실태 등을 반영하여 공장의 준수사항의 집행 여부 처리 가능함. 끝.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11.02)

[3]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 (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 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2) 상수원보호구역 내 초지허가 득한 경우 가축방목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전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유지를 승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유지에 가축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며, 초지법에서는 가축을 놓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고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있던 축사(초지조성허가 받음)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할 경우,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련”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 적법하게 초지조성허가(축사)를 득하고 허가목적에 부합한 용도로 활용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금지행위 규정에 적용받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호구역 지정 전에 득한 허가의 구체적인 내용, 초지조성허가 외 축사건축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해당 여부, 국유지 승계 등 개별법 적용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8.17, 국민신문고)

13)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개축에 관한 질의

<질의 사항>

1. 환경부령 제708호 - 상수원 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의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개축, 재축

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상기 법규 범위 안에서 기존 농가주택 105 m² 과 기존 부속건축물 (창고) 54 m²를 다음과 같이 기존 건축물 범위 이하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가. 개축할 때 농가주택과 부속건축물 (창고)를 별동으로 분리하여 개축

나. 개축할 때 농가주택과 부속건축물 (창고)의 벽을 합벽으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개축

상기와 같은 2가지 경우 중 “나“를 적용하여 개축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바쁘시겠지만 질의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별첨 참조)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의 개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재·개축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가주택과 부속건축물의 합벽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개별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0.11, 국민신문고)

14) 어떤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의 경우 허가가 필요한지 질의

<질의 사항>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2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하는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 신청하여야 하는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행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어떤 행위에는 불허하고 어떤 행위에는 허가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업무지침 등의 행정규정이 있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 단순히 법률규정에 의해 제한한다는 답변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기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하는지, 이 제한 사항은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경부의 허가나 불허하는 처리의 기준이 되는 업무지침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업무지침 등인지 답변 요청합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에 대한 불편을 겪고 계신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행위제한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 바랍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상수원수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 및 개발행위 제한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 바랍니다.
4.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사항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자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임목의 벌채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2.14, 국민신문고)

15)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인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에 대한 질의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방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축을 놓아 기른다’는 축사 안에서 키우지 않고 축사 밖에 놓아기르거나 매어두고 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목을 방지하는 것은 분뇨로 인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축사의 설치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공작물을 지면에 놓고 이용되는 것은 수도법령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보고 있으므로 소규모 축사의 경우에도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과 단속권을 갖고 있는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07.13, 국민신문고)

16)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 허가권의 상속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 원거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내수면 어업면허 직위승계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로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어업허가권은 인적허가 사항으로 허가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로행위는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계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의 오염 우려가 적은 자망어업 또는 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동 어업 허가권은 인적허가 사항으로 허가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7) 어업권에 대한 양도 및 양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음.
2. 다만,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계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의 오염 우려가 적은 자망어업 또는 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로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3. 동 어업허가권은 인적허가 사항으로 허가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 (騒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몰이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18)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분수림 벌채 관련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임야를 시와 분수림 계약을 하여 임목 벌채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임목 벌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조림사업도 공익사업이고 이에 따라서 임목벌채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임목벌채를 하기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임목 벌채를 허가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1항4호에 따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임목의 벌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06.20, 국민신문고)

19)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분수림 벌채 관련

<질의 사항>

문의를 한번 드리고 지자체 관련담당자하고 상담도 했는데.. 또 다른 궁금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글을 남깁니다.

순천시 주암댐 근처 분수림 임야 벌채관련 문의 드리고. 상수도보호에 지장이 없다면 지자체 허락 하에 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림과 담당자는 최대한 협조하였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순천시 환경보호과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여 다시 찾아가 문의를 드렸습니다.

기존에 주암댐 근처에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소유한 분수림은 5~6년 후에는 벌개령이 되어 주벌할 수 있어 조림도 가능하며 숲가꾸기나 간벌작업, 조림도 좋은 임목을 키우는 공익사업이라 생각하여 말씀 드렸더니. 환경보호과에서는 벌채는 가능하지만, 숲가꾸기나 간벌 작업 시 필요한 작업로 (운재로)를 개설할 때 작업로 (운재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현재 작업로 (운재로)는 산림과의 허가만 받아도 가능한데..순천시 산림과에서 작업로 (운재로)허가만 받아서 환경보호과에 동의만 얻으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벌채 작업로 개설시 환경보호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로 이해됩니다.
2.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벌채 작업로 개설을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07.12, 국민신문고)

20)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린이집 신축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나요?”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 라목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6.10.23, 국민신문고)

21) 상수원보호구역 내 대지에 공작물 (보강토 옹벽 및 식생 블록) 설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대지에 보강토 옹벽과 식생 블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대지에 보강토 옹벽과 식생 블록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보강토 옹벽 및 식생 블록 설치 등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12.09, 국민신문고)

22) 상수원보호구역 내 준설

<질의 사항>

장마철 마을의 침수방지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퇴적물 준설이 가능합니까.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장마철 마을의 침수방지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퇴적물 준설이 가능한지” 로 이해됩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마철 침수방지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퇴적물 준설 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퇴적물 준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3.17, 국민신문고)

23)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 이전 관련

<질의 사항>

1. 타인의 토지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 건축이 준공되었음. 이 경우에 토지주가 개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기 환경부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볼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 부터란 의미가 건물 허가시점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주택의 준공 일자를 의미함 (수관 67413-470 / 1999.12.30)

2. 또한, 이전을 위한 행위허가 시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취득한 자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지 ? 어떻게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토지주가 개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 사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을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 허가 및 철거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4.05, 국민신문고)

24)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목상 전답인데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오염문제 때문에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과 답의 경우는 농지인데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또는 형질변경하여 과수원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답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인 임야에서의 나무의 식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거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나무의 식재가 가능하고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하므로

3.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전·답을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은 현행규정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4.26, 국민신문고)

25)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 증축 관련 문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 증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설화장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군요). 향후 화장장 이용객을 위해 기존 접객실을 증축 (2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면 제약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 접객실만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설화장장의 접객실 증축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적합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7.07.21, 국민신문고)

26) 상수원보호구역 내 성토 절토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목인 전인 토지입니다. 성토와 절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이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경지정리 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허가가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경지정리의 정의는 무엇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러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성토와 절토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목이 ‘전’인 토지의 절·성토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경지정리란 통상 경작하기 쉽게 토지를 정리·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적합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7.21, 국민신문고)

27)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도법으로 가능한 행위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도법으로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입목 및 대나무 재배 또는 벌채」
행위 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
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
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임목의
벌채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는 주택
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행위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 (지목 : 답, 5,885㎡)에서 농작물과 함께 유실
수 (감나무)를 재배 중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유실수 15그루를
벌채한 사항

(문의사항)

갑설)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입목을 벌채 시에는 관련 지
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벌채를 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고 유
실수 (감나무)를 벌채 하였으므로 수도법 제83조 제1호 위반으로 처분
을 받아야 한다.

을설)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언급한 입목의 벌채는 수도법 시
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수원림 (사전적 정의 :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산림) 조성·관리시 벌채와 시행령 제14조 제2호의 주택지
에서의 벌채로 국한 하고 있으므로 농경지 (지목:답) 일부에 유실수 (감
나무)로 심겨져 있던 것을 벌채한 행위는 수도법에서 정한 행위허가나
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사항이 아님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목의 벌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의 재배 및 벌채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청의 허가에 의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안에서 농사를 짓는 형식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에서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0.11, 국민신문고)

28) 농지법령 상 농막이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시설물인지

<질의 사항>

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농막이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에 해당하는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인지 아니면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아니며 허가대상 아닌지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망합니다.
2.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문구 중 “이전“이라는 용어의 뜻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5호의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을 뜻하는지 법령해석을 신청합니다.
3. 농막은 보통 컨테이너로 새로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이 제작하거나 이미 있던 컨테이너를 농지에 그대로 옮겨 놓고 사용하는 것인데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구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호와 상수원확보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건물·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3.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사항은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4. 문의하신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중 “이전“에 대한 행위허가사

항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마” 호 ~ “아” 호에 따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상수원보호구역 내 신규로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으로 판단되며,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기접수된 민원 회신 (1AA-1801-142481, 2018.01.17.) 내용과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1.25, 국민신문고)

29) 상수원보호구역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허가 문의

<질의 사항>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도 건축물 내지 공작물에 해당하는데,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원지 도로변에 시군에서 설치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물론 사유지에도 개인들이 설치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도 혼하게 볼수 있는데 모두 허가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2. 시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도로변에 설치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가목에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에 해당한다면 일반건축물 신고나 허가 절차와 달리 시군내부 결재를 거쳐 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 허가 대장에 등재하여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설치하면 되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문의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은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간이화장실의 설치 가능여부에 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여부, 공동이용시설 및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1.25, 국민신문고)

30)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안내판 및 표주 등 공작물로 행위허가 대상 질의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 (표지의 설치) 제1항에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5의 “안내판 및 표주 (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곳곳에 설치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안내판 및 표주는,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 라목 “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공작물로서 행위허가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 상수원관리규칙 제16조 (허가대장의 작성), 제19조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의 규정에 의해 각각 등재하여 관리되어야 하는데 해당 공부에 등재가 안되어 있고 현장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도 10여년이 지나 뒤틀어지고 녹슬고 안내내용도 지워져 알아볼 수 없는 흉물로 곳곳에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개인이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지 앞에 영업 안내판을 세워놓거나 사유지에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판을 세워놓는 것이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았을 경우 모두 위법으로 단속대상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상수원수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 및 개발행위를 금지 및 제한을 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내판 설치 행위 자체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입지 및 개발행위 등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형질변경 수반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의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8.02.14, 국민신문고)

31) 선큰으로 연결된 두 건물을 한 건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사항>

(질의의 배경)

- 현재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 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상황임.
- 건축설계 상 150 제곱미터의 '주택' (지상 1층, 지하 1층)과 44 제곱미터의 '부속 건축물' (지상 1층, 지하 1층)을 계획한 뒤, 두 건축물의 지하를 선큰 (상부는 오픈)으로 연결하였음.
- 광주시청 측은 계획안을 검토한 뒤 '주택'과 '부속 건축물'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선큰으로 연결된 두 건축물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질문의 요지)

- 그렇다면 선큰으로 연결된 두 건물 (주택, 부속 건축물)을 '한 동의 건물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현재 두 건물의 면적을 합해도 200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면적 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선큰으로 연결된 주택과 부속건물을 한 동의 건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1.07, 국민신문고)

3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도로점용 허가 관련 질의

<질의 사항>

1.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환경정비구역인 토지가 지방도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있고, 도시계획상으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 상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단독주택을 신축하려 하는 바,
2. 도로법에 따라 지방도에서 주택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에 접하는 길이 4미터 점용면적 약 28㎡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려 하는 바, 주택의 신청지는 지방도로보다 약 1미터 정도 높아 도로점용부분이 약간의 성절토가 발생합니다.
3. 이 경우 수도법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부분에 형질변경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질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으로의 진입도로 행위허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6.27, 국민신문고)

33)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가능여부

<질의 사항>

도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의 토지로 본 토지가 상수도보호구역 내 속하고 있으나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내와 밖으로 구분된 위치의 토지로 도로의 중앙 위치에 오, 우수 배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양방향 모든 건축물 시설 들이 오, 우수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위치의 토지입니다.

그리하여 상수도보호구역 수원지로 유입이 전혀 되지 않을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신축은 허가 가능한 행위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행위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6.27, 국민신문고)

34)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상 입목 벌채

<질의 사항>

수질보전에 영향이 없을 경우 해당 임야 전체가 벌기령이 지난 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면적 제한 없이 전체 벌목 (모두베기)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벌목 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벌채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림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배·벌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채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8.08, 국민신문고)

35) 농가주택 신축

<질의 사항>

(토지현황)

- 상서면 청림리 000 대 225 제곱미터 (자연취락지구)
- 상서면 청림리 000 목장용지 1,076 제곱미터 (자연취락지구)

(질의요지)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2013년 7월 23일 귀농 (목장용지 2,389 제곱미터 , 전 3,815 제곱미터 합계 6,204 제곱미터) 전입하여 2015년 7월부터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 위 토지현황의 000 대지 225 제곱미터 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다가 본 토지는 임야 인접토지로, 여름 폭우시 산에서 물이 내려와 재난의 위험이 있어, 산물 피해가 없는 인근 목장용지인 000 번지 1,076 제곱미터 중 축사 건물 195 제곱미터 정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의 토지 중 대지인 000 번지 225 제곱미터 를 농지로 환원하고 225 제곱미터 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요?

나. 신축할 수 있다면 기존 목장용지 (축사 :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동물은 기르지 못하고 있음) 3 필지 2,389 제곱미터 는 이미 훼손이 된 토지로 축사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225 제곱미터 외에 농가주택의 최소면적인 660 (225 제곱미터 포함) 제곱미터 까지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의 신축 또는 이전 요건”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농가주택의 신축요건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垵)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연

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이전은 수도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바.목 (수해 등 재해) 및 아.목 (영농편의)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8.26, 국민신문고)

36)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지열사업을 위한 천공

<질의 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우리 지사는 부산시 기장군에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1. 이산화탄소에 의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시설원예농업분야에 확대하고, 2. 청정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기술을 통해 농업인의 난방비용 절감으로 생산운영비를 낮춤으로서 농가의 경제력 향상 및 생산물의 가격 등 경쟁력 상승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 굴착을 통한 천공작업이 필요합니다. 천공작업 - [150A 크기로 150m 심도 굴착 후 u-tube관 (40A) 삽입]

질의내용 :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는 천공작업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열사업을 위한 천공”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천공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허가 대상으로 판단되며, 허가의 조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열사업계획이 상수원의 확보 및 수질보전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9.04, 국민신문고)

37) 상수원보호구역 벌채 관련 문의

<질의 사항>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원림 조성관리, 공공사업의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채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하고 싶어 나무를 벌채 하려는데 불가능한지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생계를 위해 버섯재배사를 하려 하는데 벌채를 못하게 하면 제약이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불가하다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벌채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나무의 재배 및 벌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는 신고사항입니다. 허가 여부는 벌채목적 및 벌채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12.05, 국민신문고)

38)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농을 위한 성토의 허가, 신고 기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영농을 위한 성토 행위에 대한 수도법상 허가,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제5호에 따르면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제3호에 따르면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은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 농지 내 영농목적의 성토를 함에 있어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허가대상),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행위의 행위 (신고대상) 내용상 차이점

질의 2.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 (안정된 상수원확보, 수질보전) 측면에서 보면 성토의 물리적 기준 (면적, 높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물리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과 유사하고 보호구역면적과 중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을 위한 성토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 영농을 위한 성토높이 50cm를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구분 적용

질의 3.

○ 결론적으로 영농 목적 성토행위의 허가, 신고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개특법에는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

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개량의 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농지내 영농목적의 성토를 함에 있어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허가대상),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행위의 행위 (신고대상) 내용상 차이점

답변 1. 경지정리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급배수, 농기계 이용 등을 고려하여 성토와 절토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성토만 있는 경지정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복토 (객토)는 비교적 얇은 두께로 덮어주어 표토를 개량하는 것으로 지반고가 거의 상승하지 않는 형질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 (안정된 상수원확보, 수질보전) 측면에서 보면 성토의 물리적 기준 (면적, 높이)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물리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과 유사하고 보호구역면적과 중첩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영농을 위한 성토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 영농을 위한 성토높이 50cm를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구분 적용

답변 2. 수도법에 따른 신고행위는 복토 등 토지개량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확일적으로 높이를 기준으로 허가나 신고를 적용하는 것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결론적으로 영농 목적 성토행위의 허가, 신고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3. 단순한 복토 등으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토지개량을 신고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03.26, 국민신문고)

39) 이축허가 후 보호구역 밖 거주

<질의 사항>

2003년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정상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보호구역 밖으로 이사를 하였음. 최근 건축을 재개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보호구역에 실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허가불가 회신을 받았음. 이런 경우에도 실거주 여건이 적용되는지?

<답변 사항>

1. 이축허가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 근본 취지이므로, 주택에 거주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자세한 사항은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0)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축물 재축

<질의 사항>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 건축된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 중(지목: 답) 금년 8월말 태풍으로 건축물 지붕이 완파되어 부득이 재축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따라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1) 화재로 인한 건축물 재축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화재로 인한 건축물 소실로 인한 재축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 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화재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는 보호구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재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2)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성토 및 절토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침수방지를 위해 토지의 성토 및 절토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을 보전하고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역으로 동 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 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임.

2. 따라서 침수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성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여부는 허가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야 하므로, 현지 여건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3) 토지 형질변경에서 경지정리의 의미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능한 경지정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지정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획을 정리하거나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함.

2. 행위가 경지정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장상황,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4)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지목 전의 토지형질 변경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는 인접 필지 (지목 : 전)를 도로로 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토지의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 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임.
2.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인접 필지를 도로로 형질변경하는 행위가 불가피할 경우, 거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5) 지목이 전인 경우 벌채 및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아 잡목이 우거져 있어 벌채 후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벌채가 금지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5호에 의해 경지정리로 볼 수 있는지?

지목 전을 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전, 답이 지목인 농지를 과 (과수원)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임목의 벌채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농약 사용이 불가피한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46)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토지 형질변경의 형태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이 허가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 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것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야 함을 의미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5]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km 이내인 지역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 세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 km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km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 km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km 이내인 지역

[본조신설 2010. 11. 26.]

47) 수도법 시행령 14조의 2의 3항 관련 문의

<질의 사항>

수도법 시행령 14조 2의 3항 “지하수법 제2조 1호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 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 km 이내의 지역”은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7조의2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부령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이며 2호 “다”에 별표1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해당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14조 2의 3항의 1 km 이내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에 벗어날 수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14조의2 3항에 따른 지하수 취수시설로부터 1 km 이내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동법 시행규칙 제3조 2호 다에 따른 제조업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 2호 지역 (지하수 취수시설로부터 1 km 이내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 설립될 공장의 승인요건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8.07, 국민신문고)

48)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상류부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와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로 구분하여 상류로부터의 유하거리를 규정하고 있음.

이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에 위치한 취수시설의 경우 유하거리 15 km가 아닌 10 km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 공장신청 예정지가 산청군의 단성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는 상류로 유하거리 13 k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단성취수장으로부터는 14.5 km 정도 이격되어 있음. 이런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상류로 유하거리 10 km 이내를 적용해서 입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2항에 따라 15 km 이내의 지역을 적용해서 입지가 불가능 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2.

본 공장의 경우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9)으로서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음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세 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본 공장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폐수 (세척수)가 일부 발생함.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 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 km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본 공장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근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가 가능하며,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를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계획으로서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가 7 km 이상이면 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이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해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고시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km 이내인 지역에 대해 공장설립이 제한됩니다.

- 해당 부지가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지역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같은법 제32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공장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입지가 가능합니다.

4.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이란 「한강수계법」, 「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7.10, 국민신문고)

49) 환경미화원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의 보호구역의 순찰 근무자로 적합한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 (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①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보호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매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및 순찰일지 작성 업무자로 환경미화원을 근무자로 할 수 있는지

- 환경미화원은 매일 쓰레기 수거 등 고유업무 처리하기도 바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근무를 겸하게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근무를 고유업무로 하여 환경미화원을 근무시킬 수 있는지
-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은 보호구역에서의 허가나 금지행위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로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 공무원을 별도로 근무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인 맞지 않는지 답변 요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원 등을 확보하여 순찰 및 조치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보호구역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2.14, 국민신문고)

50) 미령환경개발에서 민원신청 합니다.

<질의 사항>

1. 사실관계

가. A사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000-0
- 업종 : 과일 및 채소절임 식품제조
- 설립 및 사업개시 시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
- 폐수배출시설 현황 : 폐수배출량 45m³ /일, 5종 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 신고)
- 이전의 필요성 : 도로공사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임

나. B사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되치미길 000-0

2. 질의 사항

가. A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참조)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

나. 만약 공장의 이전이 금지된다고 본다면,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특히, A사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립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국가의 토지강제 수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B사의 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까지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공장이전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첨부 의견서 참조)

1) 의견서의 요지는 수도법 제7조의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와 관련하여, 산업법 제2조 제20호는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20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이라고 규정하여 ‘공장의 신설·증설’ 과 ‘공장의 이전’ 을 구별하고 있는 점, 신설, 증설과 달리 공장의 이전은 폐수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점,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A사는 강제수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공장이전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제수용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인 공장을 인근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22506호) 제5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0년 11월 26일 당시 기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부지면적 내에서 공장의 증설 및 업종 변경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공장 등은 제외)을 허가하고 있으나, 이는 기 허가받은 부지 내에서의 공장운동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허가 당시 허가받은 부지 밖으로의 이전은 신규 공장설립과 동일하게 공장신축 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에서 A사가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B사의 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B사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기 등록된 면적 (공장등록증), 기 허가받은 수질오염배출물질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폐수배출량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4.14, 국민신문고)

[6]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20.>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垔)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 제곱미터 이하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제곱미터 이하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 제곱미터 이하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가. 잠실 (蠶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나. 버섯재배사 (버섯栽培舍)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 제곱미터 이하

다. 생산물 저장창고 :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 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저장시설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 제곱미터 이하

바. 기자재 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 제곱미터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 제곱미터 이하

사.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

첫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 :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 제곱미터 이하

자.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차.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 제곱미터 이하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유치원, 경로당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종교집회장 (기도원은 제외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하

사. 효열비 (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 (移轉) :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4조 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2) 마을회관, 경로당
-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51)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축 관련 문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의 신축과 관련해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2항 가호 제3)목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에서,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라 함은 실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사짓는 필지 (면적 상관 없이)여야 하는지, 아님 임대하여 농사짓는 필지도 가능한지 또는 농지원부 (자가 또는 임대 상관없이)를 만들 수 있는 규모여야 하는지,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소유관계, 면적기준 등) 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소유관계, 면적기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농가주택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대상자 포함)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3)에서 ‘소유하는 농지’의 기준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를 의미하며, 면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6.06.20, 국민신문고)

52)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축

<질의 사항>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른 필지에 동일인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현재 필지는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로 지목은 답이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 철거 후 농지전용을 받아 신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축이 가능하겠지요?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른 필지에 동일인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현재 필지는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로 지목은 답이고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 철거 후 농지전용을 받아 신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축이 가능하겠지요?”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 12조 제2호 가목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垔)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신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11.04, 국민신문고)

53)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기반시설 허가 관련 문의

<질의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3호에서 바. 기자재 보관창고는 1가구당 100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1가구당 100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기자재 보관창고를 1개가 아닌 여러 개 (각각 다른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3호 사. 관리용 건축물의 경우,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66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예를 들어 농업을 하는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의 면적을 더한 수에 1천분의 10 이하, 66 제곱미터 이하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농업생산을 하는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에 각각 필지면적을 더한 값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기자재 보관창고는 1가구당 100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기자재 보관창고를 1개가 아닌 여러 개 설치가 가능한지와 관리용 건축물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경우 각각의 농지의 면적을 더한 수에 1천분의 10 이하, 66 제곱미터 이하로 산정하여도 되는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기자재 보관창고는 설치개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구당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가구당 1채로 100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용 건축물은 영농편의를 위한 건축물로, 각 농지에 대해 관리용 건축물이 필요할 경우, 각 농지의 1천분의 10 이하, 66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6.12.20, 국민신문고)

54)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시설물 설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항인 듯 한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항인 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로 이해됩니다.

2.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제2호의 오수·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되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공작물 설치하는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내용 및 허가가능 여부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1.25, 국민신문고)

55) 상수원보호구역의 기존주택이 있던 부지에 신축 또는 증개축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기존 주택 (건축물 대장이 있는)이 있는 부지가 지목 상 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에 있는 걸로 봐서 지정 당시 주택으로 보이는데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지목이 대지여야 주택신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법령 상에는 기존주택이 있던 부지나 지목 상 대지는 주변 지목과 상관없이 최대 330 제곱미터 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기존 주택이 있는 부지에 진입로 설치도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런 유사한 조항이 없어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법령 상으로는 위 상황 (정상적으로 등재된 건물이 지목 상 임야에 맹지 상태로 있는 경우)과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이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1) 임야에 있는 기존 주택으로 통행할 수 있는 건축법상 도로를 임야를 통하여 개설할 수 있는지요. 혹은 임야가 아니면 전답과 같은 기타 지목을 통해서는 개설이 가능한지요.

2)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기존주택의 범위 내에서만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주택 증·개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조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垆)인 토지에 가능 “하며,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동 규칙 제15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상 임야 (맹지 상태)에 기 건축된 주택 (정상적으로 등재된 건물)의 증·개축의 경우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없으나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7.08.08, 국민신문고)

56) 상수도보호구역 내 캠핑장

<질의 사항>

다름이 아니오라 대청댐 밑에 있는 캠핑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캠핑장은 분명히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뚜렷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리하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담당 공무원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하고 수자원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자 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캠핑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더군요.

허가 자체는 공원으로 허가를 내놓고 세금으로 시설투자해서 민간에 입찰로 위탁하고 (줄려면 상수도 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말로는 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지만 어찌됐던간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다 불법 카라반과 카라반 옆에는 가스통이 위험에 노출되 있고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있는데 담당 부서들은 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내 원주민들에게는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편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원요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캠핑장 못하게 하시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 주십시오. 상수도보호구역에 사는 사람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게 하지 맙시다. 주민들에게 법 지키라 하면서 왜 담당 구청 공무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 감시하고 해야 할 수자원공사 및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기준을 수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락·야영 또는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조치 등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7.09.14, 국민신문고)

57)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나의 대지에 3개 동 건축가능 여부

<질의 사항>

연면적 99.54㎡의 소매점, 연면적 99.85㎡의 음식점 (주택 용도변경), 연면적 192.53㎡의 주택 (이상 3개 동)을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주택 등의 연면적 상한을 두는 이유는 가구당 건축물의 허가 규모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2개동 이상의 건축물로 된 경우 연면적은 연면적 합계로 하여야 함
2. 소매점은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신증축이 가능하므로 소매점이 포함된 건축물의 연면적 (2개 동 이상인 경우는 연면적 합계, 이하 같음)은 200 제곱미터 이하 가능
3. 음식점은 기존 주택·공장에서 용도변경만 가능한데 기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 신축은 할 수 없음.
4.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 등으로 무분별한 용도변경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지에 수 개 동의 건물 신증축을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11.02)

58)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관련 질의

<질의 사항>

○ 관공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에 둘레길 (등산로) 조성할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라목 공공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공목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 둘레길 (등산로 길) 조성 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 라목의 공공목적의 건축물 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비영리 목적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 시설이 제12조 제1호 각목에 정하는 시설물 등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입지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여부에 대한 사항은 수질상황, 유입 인구량, 발생 오염물질 등 현장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3.14, 국민신문고)

59) 상수원보호구역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관련

<질의 사항>

보통 주민들은 컨테이너 등으로 관련 창고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편람을 보면 가설 건축물 및 컨테이너 등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은 안되는지 민원인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호와 상수원확보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건물·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사항은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가설 건축물의 경우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가능토록 한 내 행위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카목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축사는 제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설치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3.26, 국민신문고)

60) 가설 건축물이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지 질의

<질의 사항>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상의 건축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시 내용(2010. 9. 9. 선고 2010두9334판결)이 있고, 또 '건축물' 개념요소 중 토지의 정착성만 없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건축물'이 아니지만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물체 중 (건축물, 공작물, 가설건축물)의 하나로 보는 바

(질의내용)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 건축물'이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한다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 질의 결과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른 문서 통지를 요청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름을 알려 드리오니,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정책과 000에게 전화 (044-201-71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3.19, 국민신문고)

61)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신축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목은 대지, 부지면적은 126 제곱미터 (부지폭 5.5 m)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거가 정비 (2017년 공사완료) 되었으나, 토지이용계획 상 하수처리구역 지정 고시는 되어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주택신축은 126 제곱미터 인 기존 대지면적을 330 제곱미터 까지 확장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지의 폭이 5.5m로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띄우고 나면 건물 폭이 너무 협소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택 신축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아닌 기존 노후 단독주택을 헐고 단독주택 (1세대)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에 부지면적을 330 제곱미터 까지 확장하여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조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垸)인 토지에 가능 “하며, 농가주택 100 제곱미터 이하 및 부속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이 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자인 경우 주택 연면적 132 제곱미터 및 부속건축물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경우 연면적 154 제곱미터 이하) 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지면적이 아닌 건축물 연면적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또한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입지된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 개축·개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4.16, 국민신문고)

62)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자재 보관창고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문중 소유의 땅 (지목: 임)에 농기계 등을 보관할 창고를 짓고 싶습니다.

1. 기자재 보관창고의 경우, 문중 소유의 땅에 신축하려면 신청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문중 내 아무나 해도 괜찮은지?
2. 기자재 보관창고의 경우, 지목 제한이 있는지? 신청인이 보호구역 내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그 번지 외에 지목이 임야인 곳에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자재 보관창고의 설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자체 행위허가를 득한 경우 설치 가능하며
3. 이 경우 동 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에 따라 1가구당 100 제곱미터 이하 (가구별로 기자재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4.27, 국민신문고)

63)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관련 질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문의사항이 두 가지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나오지 않습디만, 환경정비구역에 의원 용도로 신축이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7호 나목에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가,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만 설치가능 하다는 의미인지, 나)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호와 상수원확보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건물·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내 행위허가사항은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호구역지정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한 사항으로서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의 부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내에서의 허가를 허용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5.15, 국민신문고)

64) 상수원보호구역 내 양봉 행위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가능한 행위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차목의 곤충사육장에 양봉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차목에 의하여 1가구당 300 제곱미터 이하의 곤충사육장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봉의 곤충사육에의 포함여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 부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8.05.10, 국민신문고)

65)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관련 질의

<질의 사항>

○ 수도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합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2조 제3호는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라는 의미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만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도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질의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중 “바 “목 기자재 보관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른 지자체 보관창고 설치가능하며, 이때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보호구역내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보호구역내에서 실질적으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6.21, 국민신문고)

66)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질의 사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1]에 관리용건축물은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함께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에서는 기자재 보관창고의 허용 규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조나 재질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7.05, 국민신문고)

67)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신축의 경우 농가주택으로 한정하는 이유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의해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데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라고 나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고자 하는데 직업이 군인이어서 농가주택이 아니므로 새로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면적은 134 평방미터에서 99 평방미터로 줄어드나 층수가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나므로 개축이 아니고 신축이라고 합니다)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농업인인지 여부에 따라 누구는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누구는 지을 수 없는 차별을 두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농업을 하게 되면 농약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텐데요)
2. 부인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고, 본인은 올해 초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근거로 상수원관리규칙의 농가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행위제한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 바라며
3.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사항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재·개축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의 건축물 재·개축 해당 여부는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아울러 동 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주민)이 지목 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대상자 포함)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8.07.12, 국민신문고)

68)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기반시설 관련

<질의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소득기반시설로서 생산물 저장창고나 기자재 보관창고 관리용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생산물 저장창고의 경우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000분의 10 이하, 버섯 저장창고의 경우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1 이하로 되어 있는데,
2. 여기서 기존의 창고면적이라는 것이 생산물 저장창고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자재 보관창고 등 관련 창고 면적까지 포함하는지요? 즉, 면적범위 안에서 각각의 창고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물 저장창고 허용면적에 관한 사항 중 “기존 창고면적”이란 동 규정에 따른 생산물 저장창고에 한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8.07.27, 국민신문고)

69) 개인주택의 환경정비구역 지정 가능 여부

<질의 사항>

개인 주택이 방류수 기준을 맞출 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제1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 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 (환경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이란 해당 지자체가 일정한 자연부락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하수도의 정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동 계획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 시·도가 지정할 수 있음.

3. 그러므로 개인주택이 하수도법 상의 방류수 기준을 맞춘다고 해서 개인주택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70)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 신축 관련 질의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주택신축 조건은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신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A라는 남편이 이미 주택 200 제곱미터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B라는 아내가 주택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신축가능 요건 상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상수원관리규칙에 부합하는 주택신축 허가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8.08, 국민신문고)

7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행위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익복적으로 유기전 보호소 또는 동물병원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1. 유기전 보호소는 건립이 가능한지,
2. 동물병원은 설립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3. 만약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근거 즉 법규나 법령, 규칙 등의 조항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지금, 임시로 유기전을 보호하고 있으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와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할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10.08, 국민신문고)

72)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공공시설 이전신축 가능 여부 외

<질의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공시설인 별정우체국을 이전신축 가능한지 여부 (이전사유 : 기존 건축물 노후와 우체국 이용고객 편의성 확보)
2. 기존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우체국용도에 맞게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3.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변경에 관한사항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11.16, 국민신문고)

73)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두막 설치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두막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원두막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상수원 관리규칙에는 원두막에 관한 법문구가 없어 설치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두막 설치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에서 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원두막의 정의는 수도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동 규칙 제12조 제3호 사목에서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 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용 원두막은 관리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1.14, 국민신문고)

74) 원두막을 설치하기 위해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질의 사항>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지역이며, 면적은 약 1,200 m²입니다.

원두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의 규제사항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시행규칙 별표4 상에는 10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는 원두막이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주변 (대청댐 하류 일원)에는 원두막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제7조 4항 및 상수원 관리규칙 별지3호 서식 상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중요한 허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두막은 전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할 시 원두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두막 설치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에서 보호구역에서 농림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바와 같이 원두막의 정의는 수도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동 규칙 제12조 제3호사목에서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

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용 원두막은 관리용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9.01.14, 국민신문고)

75) 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 관련 질의

<질의 사항>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내 1개 대지에 주택 (주택+부속건축물)과 다른 1개 대지에 주택 (주택, 부속건축물 없음.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을 소유하고 있고, 2개의 대지 중에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한 대지에 부속건축물 (66 제곱미터 이하)을 증축하려 합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속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주택 증축에 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인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제곱미터 이하 및 기존 부속건축물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 나목에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주택의 증축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신축 및 증축은 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상수원관리규칙에 부합하는 주택 신축 또는 증축 당사자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1.29, 국민신문고)

76)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지역특산물 판매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한 시설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 건축물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마목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목”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한 시설이라는 내용만 있어 질의합니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개인이 설치가 가능한지?
- 경기도조례에서 소득기반시설은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그러한 내용이 없음
2. 가능하다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동의서, 주민이 필요하다는 회의록 등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지? (군청에서는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고 함)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아목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설치주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판단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4.04, 국민신문고)

77)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학교용지인 경우 농가주택 신축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원거주민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에 농가주택 신축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垸)인 토지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9.04.17, 국민신문고)

78) 상수원보호구역 기자재 보관창고 건축신고에 농지원부 등 제출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

<질의 사항>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시 수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법령 등“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자재 보관창고 건축 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단서 규정에 의해 기자재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신고서와 건축법상 구비서류만 구비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 표시인” 을 건축신고서에 찍으므로써 행위허가신청서에 같음하므로 수도법령에 따른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으므로 “농지원부“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수도법령 등에 근거가 없으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위반이며
4.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자재 보관창고 건축신고 거부 처분행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라는 규정에 의해 권리를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자재 보관창고 건축신고 행위허가 시 수도법령 등의 어떤 근거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라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기자재 보관창고 건축신고에 농지원부 등 제출요구의 법적근거 요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자재 보관창고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근거하여 농림업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농지원부 등재 대상자 포함)에 의한 농업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7.18, 국민신문고)

79) 상수원보호구역 창고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였는데 화장실을 내부에 설치 하고자 함. 가능여부 문의. 또는 최초 설치할 때 화장실을 설치한 창고를 득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농업용 창고 내부에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창고는 생산물 저장창고와 기자재 보관창고이며, 농업생산물의 저장 및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입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 내부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수분뇨가 발생하는 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도 매우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11.26, 국민신문고)

80) 상수원보호구역 소득기반시설 (생산물 저장창고) 허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3호 다목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득기반시설 중 생산물 저장창고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3호에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판단하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목에서 창고면적을 '보호구역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면적을 창고를 짓고자 하는 필지면적의 1천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인지, 창고를 짓고자 하는 필지 이외에 건축주 소유의 인접필지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필지의 1천분의 10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생산물 저장창고 건축주 및 면적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생산물 저장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농업 종사자란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자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허가권자는 방법의 하나로 농업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창고면적의 산정기준인 농지의 면적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로 인접한 농지의 합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지의 일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호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1.01.04, 국민신문고)

81) 월거주민으로서 혼인하여 신규 세대주가 된 경우 농가주택의 신축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월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자가 현재도 부모 소유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구분리 (세대분리) 전에 신축할 수 있다는 해석인지 가구 분리 (세대분리) 후에 신축 할 수 있다는 해석인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월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세대주가 된 자의 경우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함.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 되어야 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함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목 상 대지인 토지에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직계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한 가족으로 보아 세대원이 주택 신축을 할 수 없으나, 직계가족이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가구와 세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다만, 신축 가능한 주민을 세대주로 한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건축 및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해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한 해석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2) 배우자 및 미혼자녀 등을 세대 분리한 농가주택의 신축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이면 가족구성원 (배우자, 미혼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주택 신축이 가능하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으로 볼 때 주택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가족별 주택허가가 타당하다고 보이며,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주민을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세대주로 한정하며,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면적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면적을 합산하여야 함. 가족구성원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세대주의 자격으로 각각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도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가기관에서는 무분별한 건축 및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해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3) 6개월 거주 요건에 대한 기간 적용 범위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 최근 고향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살고자 함. 신축요건 중 6개월 실거주가 최근 6개월인지? 현재 보호구역내 주소를 두고 과거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垔)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예전에 살았던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가능함.

2.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원주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4)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농사를 짓는 경우 주택의 신축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권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垔)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함.
2. 농가주택 신축 자격 요건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으로 확인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실제 거주하여야 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5) 건축물 개축에 있어 거주요건 여부

<질의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12조 2항 가목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상수원관리규칙 12조 2항 나목 주택의 증축 대상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축에는 원거주민이나 거주하는 주민 등 대상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원거주민이나 거주하는 주민 등이 아닌 대상자가 개축 행위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5호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을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과 관련 거주지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2.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6) 주택 증축에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거주요건의 구성 요건

<질의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나목 (주택의 증축)에서 보호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주택 증축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예정 주택소유자(세대주)만 실제 거주하면 증축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7) 적용받는 규제가 중첩되는 지역에서 주택의 신·증축 허용 규모

<질의 사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GB), 상수원보호구역을 동시에 적용받는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이들 제한구역에서의 주택 신·증축의 허용 규모가 서로 다른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사항>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의 규모 등은 각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 등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GB)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제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한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들 제한규정 중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3.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에 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8) 기존 건축물을 1층은 기자재 보관창고, 2층은 주택으로 증축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기존 2층 단독주택을 1층은 기자재 보관창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증축 가능한지? 증축 시 100 제곱미터에서 기자재 보관창고 면적 100 제곱미터를 더하여 지을 수 있는 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나목에 의한 생활기반시설로서 농가주택과 제12조 제3호 바목에 의한 소득기반시설로서 기자재 보관창고는 각기 별개의 건축물 설치를 전제로 한 규정임.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제곱미터 이하 (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농가주택의 1층에 기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농가주택과 동 창고를 합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가능 (단, 따로 기자재 보관창고를 건축하는 경우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할 것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9) 대지의 필지 분할 후 주택 신축 허용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의거 조건을 만족한 농가주택의 신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지를 여섯 필지로 토지분할하여 농가주택 100 제곱미터 이하로 여섯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목 상 대지인 토지에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음.
2.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소유한 농가주택 총 연면적 합이 100 제곱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3. 신축 가능한 연면적을 한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건축 및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해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한 해석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0) 주택 증축 시 면적 기준과 증축 가능한 지목의 종류

<질의 사항>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증축이 가능한데 기존 주택이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된 주택의 면적인지, 세대주 및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의미하는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원거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 부속건축물 증축 시 대지에만 가능한지 대지와 접한 전, 답에서도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보호구역에서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으로 볼 때 보호구역 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증축 범위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원거주민이 기존 부속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지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자세한 사항은 허가기관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1) 농가주택과 기자재 보관창고를 한 건축물로 설치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2호 가목 1)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한 건물로 건축이 가능하지, 아니며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별도의 공간에 기자재 보관창고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1)의 규정에 따라 농가주택은 지목상 대인 토지에 연면적 100 제곱미터와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 보관창고는 1 가구 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 제곱미터 이하로 신축이 가능함.

2. 농가주택 및 기자재 보관창고는 모두 연면적으로 면적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용도를 한 건물로 신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2) 농지를 전용한 농가주택의 신축

<질의 사항>

원거주민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딸기 재배를 하고 있음. 분가한 장남 내외는 인근의 주택을 임대하여 가족영농을 하고 있는데 생활의 불편으로 인근 농지를 전용하여 아들 가족이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 (연면적 132 제곱미터 이하와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귀하의 장남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가주택의 신축이 가능할 것임.

2. 다만, 농지를 형질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됨. 이에 관하여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장이 주변 여건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서 판단할 사안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3) 농가주택 신축에 있어 동일생활권의 범위

<질의 사항>

농가주택 신축 시 농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서류는 무엇이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괄호 3)에서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서 동일 생활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 상 대인 토지에 신축 할 수 있는 농가주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농가주택 신축 시에는 신청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업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허가기관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호 가목 3)의 의미는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이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안에 있거나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 즉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어 농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동일 생활권 인정 여부는 농지 및 농가주택의 위치 및 거리, 작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4) 원거주민이 주택의 부속건축물 일부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자 증축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원거주민인 경우 기존 부속사 내 일부 공간을 허용면적 (154㎡ 이내) 내에서 주택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 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로 가능하고,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부속건축물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로 증축이 가능함.
2.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 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하나, 기존 부속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는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로 가능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5)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 건축 중 매도 혹은 양도 조건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건축 중에 매도 혹은 양도할 경우 양수인의 조건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조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垔)인 토지에 농가주택만 가능하며, 농가주택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함.
2. 상수원보호구역의 농가주택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기 규정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상 불편 해소하고자 한 법적취지 및 주택의 편법적 소유행위 등을 감안할 때 양수인의 조건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조 가목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6) 도로 건설로 인한 주택 및 창고의 이축과 규모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창고 2동과 주택 1동을 공익시설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 후 종전과 동일 규모, 동일 용도로의 건축이 가능한지? (창고 2동은 토지 일부 수용과 함께 도로공사 전 철거 하였고, 주택은 도로공사 중 소음과 먼지, 물고임 현상 등 도저히 본래의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없어 철거함)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바목에 의하여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로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함.
2. 또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6호에 의하여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의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은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
3. 따라서, 상기 건의 경우에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6호와 같이 공익시설인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철거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종전과 동일 규모, 동일 용도로 건축이 가능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7) 빈발하는 수해로 인한 이축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빈발하는 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주택의 이전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전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함.
2. 타법 상의 제한사항이나 기타 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8) 토지 소유주 부동의로 주택 이축 시 거주요건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주택 이축자격으로 주택 소유주가 반드시 무주택자이고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외지인의 무분별한 유입 및 오염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신축에 일정한 요건 (원거주민 혹은 6개월 이상 실거주자)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택의 이전 역시 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사목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토지 소유자가 증·개축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음.
3. 동 조항은 해당 주택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해온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이용하여 외지인이 편법적으로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4.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신축을 위한 최소한의 거주 요건에 준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에게 주택 이전을 허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9)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경유하여 설치하는 하수도

<질의 사항>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수도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경유하여 공사를 공공하수도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하여도 되는지?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시설이라 하여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사가 가능한지?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하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하수관로가 취수탑의 취수관로 위나 아래로 직접 통과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항>

1. 공공하수도는 하수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경우도 공공하수도에 해당됨.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에 의해 공공하수도의 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 경우 허가권자는 상수원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수도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에서 행위가 제한되고 있음.
4.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수원수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하수관거와 취수탑은 서로 근접 및 교차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우회 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수관거를 취수탑의 취수관로 아래 (상당한 거리 이격)로 통과하도록 하는 등 사고 시에도 상수시설에 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충분한 사전대책이 필요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0)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설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의 공익 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적용하여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체육시설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아목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될 경우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따라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동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행위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임.
3. 아울러, 동 시설은 지역주민 만을 위한 비영리시설이어야 하고, 그 규모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운동장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1)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과수원, 유실수 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의 요건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에 관리용 건축물은 과수원, 유실수 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할 수 있는 바,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 싶은데, 과수원, 유실수 단지, 원예단지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정확히 없다면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가 농지원부에 표시되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지?

차광막을 씌우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 안에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때 이미 지어진 버섯재배사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버섯재배사에 구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답변 사항>

1. 수도법에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과수원, 유실수 단지, 원예단지에 대한 조건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과수원, 유실수 단지 및 원예단지가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2. 수도법에 따른 행위허가 없이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후에 행위 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축한 건축물이 수도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후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수도법에서 버섯재배사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현 구조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은 소관 부서 및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2) 농지에 기자재 보관창고 설치

<질의 사항>

(질의 1) 상수원보호구역 농지인 대상지에 농림용 기자재보관 및 농산물 건조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100㎡ 이하로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가능 여부?

(질의 2) 보전녹지지역이며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건축행위자는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현지인 (45년 거주)이며 또한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는 바, 부지의 행위자는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창고를 30평 이하로 신축 행위를 하고자 함.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부지면적: 660㎡ 창고면적: 100㎡ 이하의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는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바목에 기자재 보관창고 : 1 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 제곱미터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 가구당 100㎡ 이하로 기자재 보관창고를 설치 할 수 있음.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은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1 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 제곱미터 이하의 기자재 보관창고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3) 기자재 보관창고를 컨테이너 구조로 설치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소득기반시설 중 기자재 보관창고를 지을 때 컨테이너 구조로 지을 수 있는 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가구당 1개소의 가설 건축물 (기자재 보관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상수원관리규칙에도 부합하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함께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바목에서는 기자재 보관창고의 허용 규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조나 재질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4) 버섯재배사 설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한 면적의 설치 허용 여부

<질의 사항>

(질의 1) 마을공동 버섯재배사를 건립하는 경우, 버섯재배사 총면적을 버섯재배 참여 가구 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마을공동 버섯재배사 운영 가구가 23 가구인 경우 11,500㎡ 이하로 가능한지?

(질의 2) 마을공동 버섯재배사를 건립하는 경우 행위면적을 참여 가구 수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할 경우 1 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 면적을 포함하여 500 제곱미터 이하의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음.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하여 설치면적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원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할 경우 1 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 면적을 포함하여 500 제곱미터 이하의 버섯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음. 마을공동버섯재배사의 건립 목적 및 규모,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 수에 비례하여 설치면적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5)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질의 사항>

(질의 1)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이 가능한지?

(질의 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상수원 보호구역내 설치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제7조 제1항은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 사항임.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 건은 ① 기존 수원림 등의 제거 및 토지의 형질변경과정에서 장비 및 사람으로 출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② 산림의 비점오염 저감효과 감소에 따른 오염부하량 증가, ③ 강수 시 절개사면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탁수 발생, ④ 삼상선로와 전기설 등의 부속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사유출, ⑤ 시설운영 시 집광시설의 청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용하기 어려움

3.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7호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6) 마을공동 구판장의 설치하고 구판장 내 음식점 설치 허용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공동 구판장을 설치하고 구판장 내 음식점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마목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수도법에서는 상수원수의 수질보전과 동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3. 귀하께서 질의한 음식점 신축은 마을 공동구판장 신축과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7)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건축물 개축

<질의 사항>

토지의 소유자는 다르나 건축물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사용승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개축 (건축)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에 대해 관할청이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에 의해 개축·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건축물인지 여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개축·재축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판단하여 허가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8) 허가나 신고 없이 20㎡ 이하의 농막 설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20㎡ 이하의 농막을 설치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제7조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 하도록 하고 있음.

2. 또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제시하신 농막은 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09) 주민 연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LPG 저장탱크 설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LPG 저장탱크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라목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공작물이나, 동 규칙 제12조 제4호 (주민 공동이용시설) 마목의 유류취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사항이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신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음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유류취급시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판매소를 의미하며, 상기 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LPG 저장탱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LPG 저장탱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아닌 지역 주민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호 라목의 공익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장이 설치목적·사용범위 및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3. 따라서, 상기 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LPG 저장탱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유류취급시설이나, 동 규칙 제12조 제1호 라목의 공익시설로 보기에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볼 경우에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아목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것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10) 부속건축물 설치 시 주택 내 다른 층에 허용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에서 부속건축물을 설치할 때 주택과 연결된 통로가 없고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지하, 1층 또는 2층에 부속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는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신축),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제곱미터 이하 (증축)의 부속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상기의 부속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의한 부속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은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상기 시설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의한 부속건축물의 의미, 현장 상황, 건축물의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7]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0.>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 제3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 (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111)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변경 질의

<질의 사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의 단독주택 건축물 140.62 m² 중 일부 55.05 m²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로 2015년 06월에 용도변경 한 건축물을 다시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단독주택으로 환원하려 하는바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 중 일부를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한 후 다시 용도변경한 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하여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 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3.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가능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범위에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확대는 거주인구의 증가 및 기타 오염발생이 높은 업종으로의 재변경 등이 우려되므로, 관련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09.20, 국민신문고)

112)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질의 하고 싶습니다.

2004년 부터 토지 소유 하였고, 현재 지목은 창고용도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도 창고입니다. 이번에 용도변경을 창고에서 단독주택으로 총 연면적 77 평방미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이나 수도법에도 자세한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 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창고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서 하고 있는 용도변경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창고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도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1.06, 국민신문고)

113)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주택 건축물 용도변경 질의

<질의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정비구역에 기존 건축물이 1층 단독주택 (32.04 m²),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29.21 m²) 및 별동의 단독주택 (부속사: 62.87 m²) 과 2층 단독주택 (138.74 m²) 건축물이 존치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주택 부속사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인 주택에 종속된 용도로 부속사의 용도는 붙임 건축물대장과 같이 당연히 단독주택에 해당 되므로,

2. 1층의 단독주택 (32.04 m²) 및 별동의 단독주택 (부속사: 62.87 m²)을 추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1층 전체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사용하려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

붙임 : 건축물대장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1층의 단독주택 (32.04 m²) 및 별동의 단독주택 (부속사: 62.87 m²)을 추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하여 1층 전체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사용하려 하는 바 가능한지 여부 ” 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보호구역의 개발 및 오염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관리규칙에 명시된 일정범위 내에서 허가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에서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은 200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그 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주택에서의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및 부속건물의 용도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3.10, 국민신문고)

114)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가능 여부 문의

<질의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이자 환경정비구역인 지역에 종교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2. 합법적인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로 가능한 행위인지요. 아니면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종교집회장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제5호에 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의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여부, 공동이용시설 및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7.06.28, 국민신문고)

115)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4항 주민공동이용시설

바. 종교집회장 (기도원은 제외한다)

사. 효열비,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질문 1> 종교집회장이나 사당을 지칭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용도인지 여부

질문 2> 건축법상 종교집회장은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으로 12조 4항 바목에서 기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건축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상 주민공동이용시설 별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9.28, 국민신문고)

116)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관련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관련 질의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인 시설물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 후 사무실, 농업용 창고, 건조장, 육묘장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데 가능한지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4호를 보면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한 시설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 수리소 등은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용도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 후 사무실, 농업용 창고, 건조장, 육묘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변경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한 취지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경우로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용도변경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청소년수련시설의 사무실·농업용창고·건조장·육묘장으로의 용도변경사항은 위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2.07, 국민신문고)

117)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입니다.

현재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슈퍼마켓으로 이용 중입니다. 하지만, 인근에 주민이 없어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현재의 시설을 종교집회장인 사찰로 용도를 변경 가능한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사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 따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슈퍼마켓에서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사항은 위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2.20, 국민신문고)

118)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에서의 임도개설 가능 여부 질의

<질의 사항>

수도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에서 임도 개설을 목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도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 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의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와 타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4.11, 국민신문고)

119)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전용 관련 문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 건축된 건축물 (건축물대장 있음)이 지목 상 전에 지어진 경우,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수도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 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의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와 타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8.06.22, 국민신문고)

120)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용도변경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5호의 나목의 “사무소”라 함은, 개인사무소는 물론 공공 또는 공익시설인 우체국 (별정우체국 포함)의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도 포함되는 개념인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5호 나목 “사무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 사용목적이 업무시설 용도인 경우 일반업무시설과 공공업무시설을 “사무소” 범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11.26, 국민신문고)

121)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기간연장 관련

<질의 사항>

개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시설물 설치로 신청 기관에 행위허가 허용됨.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 당시 사업계획서 공사기간 2015년~2018.12월

질문 1: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2018.12월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으로 2019.12월로 변경이 되어 행위허가를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 2: 행위허가 신청서에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행위허가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사가 준공이 될 때까지 행위허가 기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법을 찾아 보았으나 행위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여 부득이 문의 드리오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으나,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행위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12.17, 국민신문고)

122) 상수원보호구역 내 벌채 관련 질의

<질의 사항>

수도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입목의 벌채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원림의 조성·관리의 범위 및 주체가 궁금하며,

만약 개인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의 침엽수인 낙엽송을 벌채 후 수원함양이 좋은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를 식재할 경우 위 법의 수원림 조성에 해당되어 벌채 행위허가 가능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벌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수원림 조성·관리의 주체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의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3.21, 국민신문고)

123)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질의 사항>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불법행위인지? 용도변경을 한 경우라면 원상회복 시켜야 하는지?

<답변 사항>

1. 수도권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용도변경의 범위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축사에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시설은 농산물보관창고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음.
3. 아울러 원상복구 여부는 수도권법에서 사후처리 문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임. 축사는 그 규모 (사육 두수) 및 축종에 따라 오염발생 정도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축사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오염발생 정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24) 마을 공동구판장을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방앗간으로 용도변경

<질의 사항>

마을 공동구판장에서 건축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방앗간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피자나 치킨판매도 가능한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딸기잼, 표고버섯의 분말가공) 등이 가능한지 (식품영업허가 가능 여부)?

마을 공동구판장을 지역소재의 농업회사 법인에게 임대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마을 공동구판장의 용도변경 시 30% 이내로 용도변경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마을 공동구판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제5호 다목의 용도범위 (마을회관, 경로당,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 대피소, 주차장) 내에서 용도변경 가능함.

2. 따라서, 소매점·휴게음식점·방앗간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3. 마을 공동구판장의 위탁·임대에 대해서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마을 공동구판장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25) 현재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을 멸실 후 다른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영업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음.
현재 식당을 폐쇄하고 같은 보호구역 내 다른 건축물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일반음식점을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
2. 그러나 환경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 안의 총 호수의 범위 안에서 기존 공장, 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허가여부는 관할 지자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8]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8. 8. 20.>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나.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다만,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이나 기존 공장·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2. 그 밖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가. 목욕장 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공장·주택의 목욕장 시설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목욕장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한

정한다.

나. 종교집회장 (기도원은 제외한다)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

다. 이용원·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회관·창고 (이하 이 목에서 “이용원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기존 공장·주택의 이용원 등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1)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는 다음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시·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특정지역기준에 적용되는 각 수질기준 항목의 5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10퍼센트

나)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퍼센트

다) 가) 및 나) 외의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퍼센트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126)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 및 소매점 신축 면적

<질의 사항>

현재 해당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자 환경정비구역이 대지입니다.

건축물을 계획 중인데요. 1층에는 200 제곱미터 이하의 소매점을, 2층에는 150 제곱미터 정도의 주택, 3층에는 50 제곱미터 정도의 주택을 계획 중입니다. (합계 연면적 300~400 제곱미터 정도의 건축물)

다른 조건들은 제외하고 면적만 봤을 때, 이와 같이 한 건축물에 두 가지 다른 용도를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설치해도 괜찮은지요.

(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1호 가목에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다목에는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주택과 건축물을 합쳐서 최대 연면적 400 제곱미터 까지 신축 가능한지요.)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한 건축물에 소매점 200 제곱미터, 주택 200 제곱미터 이하로 동시에 설치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주택’ 및 ‘소매점’은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 등을 고려 할 때 건축물 당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08.26, 국민신문고)

127) 상수원관리규칙의 음식점 총수 관련 등

<질의 사항>

- 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음식점 총 수에, 기존 허가음식점이 포함되는지,
- 2) 환경정비구역에서 소매점·이용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3)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의 ‘기존’의 적용 시점은 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인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행위허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음식점 총수는, 기존 허가음식점을 포함한 총 음식점 수를 의미하며, 이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3.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용도변경 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가가능하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에서 용도변경 가능한 범위가 명시됨. 이 범위에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확대는 거주인구의 증가 및 기타 오염발생이 높은 업종으로의 재변경등이 우려되므로, 소매점·이용원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의 ‘기존’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자문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귀 기관에 회신하겠습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6.10.27)

128)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의 음식점 명의이전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원거주민이 허가를 득하여 기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매매로 인해 원거주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원거주민이 아닌 자가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원거주민이 허가를 득하여 기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매매로 인해 원거주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원거주민이 아닌 자가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의 라목은 원거주민이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휴게·일반음식점을 매매로 원거주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원거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제한적으로 휴게·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을 고려할 때 휴게·일반음식점을 원거주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양수, 매매, 상속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는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6.11.29, 국민신문고)

129)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

<질의 사항>

수도법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 1항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다음 각목의 건축물이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위 항의 법령에 근거 본인은 상수원보호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금정구 두구동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신축을 금정구청에 제출한 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는 맞지만 기장군 거주 주민은 금정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축불가 판정을 받은 바, 위 법령에 근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신축을 금정구청에 제출한 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는 맞지만 기장군 거주 주민은 금정구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축불가 판정을 받은 바,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 부탁 ”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농가주택 신축요건은 ①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② 지목이 대지인 토지, ③ 소유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 건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금정구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동일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농가주택 및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 모든 개발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현지 사정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임 (수도법 제7조 제4항)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12.20, 국민신문고)

130)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 행위 허가 관련 질의

<질의 사항>

현재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공기가 좋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 하려고 2016년도 계획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곳이 상수도 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이나 건축허가가 되나 6개월 이상 상수도보호구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16년 2월에 부산광역시 금정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건축허가를 기장군청에 신청을 하였는데 거주지와 건축 신청지가 다르므로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를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질의요지

가. 동일한 광역시 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구역이 기장군과 금정구로 되어 있으며 거주지 (금정구)와 건축 허가지 (기장군)가 다를 경우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 해석상의 견해

가. 제1안: 동일한 광역시내 동일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이면 거주지와 건축허가 신청지가 다르더라도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일 겨우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가능

나 제2안: 동일한 광역시내 동일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이더라도 거주지와 신청지의 군, 구가 다르므로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부적합하므로 생활기반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불가능

3. 민원인의 의견: 동일한 광역시 내이고 동일한 수계에 원거주민 또는 상수도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거주지와 건축 신청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 동일한 광역시내 상수원보호구역 관할구역이 기장군과 금정구로 되어 있으며 거주지 (금정구)와 건축 허가지 (기장군)가 다를 경우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로 이해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농가주택 신축요건은 ①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 ② 지목이 대지인 토지, ③ 소유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 건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금정구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동일하고, 상기에서 언급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농가주택 및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상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 모든 개발행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현지 사정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임 (수도법 제7조 제4항)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1.17, 국민신문고)

131) 상수원보호구역이자 환경정비구역에 창고 신축 관련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 창고는 농업용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다목에 보면 환경정비구역에 창고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경정비구역 창고도 농업용 창고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창고 (농업용 외의 용도로 쓰이는 창고)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다목 환경정비구역에 창고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환경정비구역 창고도 농업용 창고만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환경정비구역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하수도 정비 등을 완료한 보호구역에 지정하며, 일용품 소매점, 이용원, 창고 등의 신축 등 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 관련 규정인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다목 ‘창고’의 범위는 농업용 창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창고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7.03.27, 국민신문고)

132)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부속 건축물에 관한 질의

<질의 사항>

질의는 첨부 파일에 올렸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정비구역에서 부속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증축 규모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기존 주택 증축 (부속건물과 기존주택의 일부분을 연결하여 증축)과 관련한 행정적인 부분은 건축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7.04.11, 국민신문고)

133)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 소매점 신축할 수 있는 자격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이나 소매점을 신축할 수 있는 자격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택이나 소매점을 신축하는데 주민 개인이 아닌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 명의로 신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조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垆)인 토지에 가해 하고,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동 규칙 제15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소매점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일정규모를 허용하고 있으며,
3. ‘마을회’ 등 공동명의로 주택신축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실제 거주 및 건축물 연면적 제한 등의 건축물 신축조건을 감안할 때 제도 취지상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1.16, 국민신문고)

134)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000-0번지 거주민입니다.

기존의 집이 산의 계곡부에 위치하여 호우 시 빈번한 토사 유출과 지속적으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4년 전 1억원을 들여 보수를 하였으나 건물의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거주하는 대지의 진입로가 산림청 부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10여년 전 법적 도로가 상실되어 불법 점용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서는 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창원시 성산구 건축과와 창원시 수도시설과에 의뢰한 결과 이축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물을 이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뚜렷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의 건물은 정화조를 거쳐 자연 방류되는 방식인데 이축 후면 다행히 창원시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비록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상수원의 오염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슈퍼마켓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변경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서의 용도변경은 원거주민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서 총 호수의 5~20%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문의하신 슈퍼마켓에서 휴게음식점으로서의 변경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2.20, 국민신문고)

135)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의 종교집회장 신축, 증축 면적제한

<질의 사항>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4호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설) 바목에서 종교집회장 (기도원은 제외한다)은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 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칙 제14조에 의거 지정 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제2호 나목에 종교집회장 (기도원은 제한한다)의 신축, 증축 또는 기존 공장, 주택의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변경만 규정하고 면적 제한은 없음.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종교집회장을 신축, 증축 할 때 면적 제한 없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모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설) 수도법 제정 취지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시 행위제한의 완화의 취지로 볼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을 적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500 제곱미터 미만의 종교집회장으로 신축, 증축 가능

제2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6호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로 1,000 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축, 증축 가능

의견)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의거 지정 고시된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종교집회장 신축, 증축은 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취지인 행위제한의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제2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정비구역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환경정비구역 내 종교집회장의 신

축·증축은 제한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의 지장여부를 종합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8.01.30, 국민신문고)

136) 건축물을 신축하고 매매 후 다시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 환경정비구역에서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소매점을 100 제곱미터 신축하고 난 후, 매매하고 다른 곳에 다시 100 제곱미터의 소매점을 신축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요. 혹은 110 제곱미터를 신축하게 되면 허가가 가능한지요.
2. 환경정비구역에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사람이 판매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주민은 200 제곱미터 이하 소매점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소매점을 양도·양수 후 동일인의 소매점 신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거주 및 건축물 연면적 제한 등의 주택신축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생활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에서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3.14, 국민신문고)

137) 상수원관리규칙 15조 자녀 분가와 동거

<질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시 조안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 구역에 거주하는 만 61세 되는 원주민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15조에 따르면 원거주민이 신 증축할 경우 200 평방미터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자녀가 분가하지 않았을 경우 300 평방미터 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세 딸을 두고 있으며 큰 딸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근거리 다른 주소지에 사위가 세대주로 하여 약 3년 정도를 살다가 현재는 친정 아버지인 제 집으로 주소지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큰 딸의 시댁에서도 설 명절을 구정을 지내 오다가 저의 집안 상황을 이해하시고, 신정을 지내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저의 큰 딸과 큰 사위는 구정을 저희와 함께 지내며 모든 기제사도 맡아 하면서 큰아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집으로 합쳤으면 자녀가 분가하지 않고 한 집에 사는 것으로서 300 평방미터까지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한지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하며,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 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물을 증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9.11, 국민신문고)

138) 환경정비구역 내 용도변경 문의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15조의 질의입니다. 1층 주택이며 지하 창고의 경우 창고를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요?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위 내용의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1층이 주택이고 지하가 창고이면 창고가 곧바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안되고 주택으로 변경 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수는 동 규정의 각호(가~다)의 범위 (환경정비구역의 총호수의 비율) 내 허용가능한 바, 창고에서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및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9.04, 국민신문고)

139) 1AA-1808-312790 민원 수정

<질의 사항>

1AA-1808-312790 민원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300 평방미터까지 신축이나 증축이라 적었습니다만, 신축이 아니라 증축 또는 개축으로 가능한지요? “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하며, 혼인한 자녀가 분가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00 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8.09.11, 국민신문고)

140) 음식점 40년 허가권도 인정 안 하는 조안면의 과도한 규제

<질의 사항>

저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음식점을 2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세면 블록조, 스테트이며 1968년 준공 (38.43 평방미터) 음식점 허가는 72년 3월 20일입니다.

저는 1996.12.28 소유권을 이전 받아 음식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이 노후되어 신축을 하려고 시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올 2월에 의뢰 하였습니다. 월 2~3회 정도 읍사무소에 찾아가면 긍정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만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 9일 설계를 접수하라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희가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한다 합니다. 저희는 50년 된 낡은 집이여서 지붕이 들뜨고 비가 세며 건물의 균열이 심하여 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장사를 더 하다가는 건물이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 손님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기에 문을 닫고 신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원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도변경 해줄 수 없다고 하니 위험을 감수하고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주택’ 혹은 ‘점포’ 용도인 건축물로 허가를 득하고,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동 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해 온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 허용범위 내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재·개축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11.30, 국민신문고)

141) 경기 광주시 남종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 신축에 대한 문의

<질의 사항>

(질의의 배경)

현재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 변 상수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상황임.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약 190 제곱미터의 한옥을 계획하고 약 5 제곱미터의 '한옥 정자'를 계획하여 두 건물이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되도록 계획한 상황임. 약 60 제곱미터의 부속건축물 또한 계획한 상황임. 허가권자인 경기도 광주시청 측은 위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회신을 제안한 상황임

(질문의 요지)

단독주택의 기준 면적인 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이용하여 약 190 제곱미터의 한옥을 계획하고 약 5 제곱미터의 '한옥 정자'를 계획하는 것은 면적 상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약 5 제곱미터의 '한옥 정자'가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준 면적을 이용하여 주택에서 분리된 별채 (한옥 정자)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 가목에서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 제곱미터 이하 부속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1.14, 국민신문고)

142)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허가 관련

<질의 사항>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일부에게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허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기존 음식점들은 임대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데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3. 만약 가능하지 않아 최초 허가자에 대해서만 영업권을 인정한다면 영업권을 받은 사람이 일신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못하게 될 경우 다시 주택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가족 간의 증여나 상속은 가능한 건지?
4. 건축물 대장 상에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되었다면 대인적 허가가 아닌 대물적 허가로 보아 매매나 임대에 제약이 없음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음식점”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은 원거주민이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휴게·일반음식점을 매매로 원거주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원거주

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제한적으로 휴게·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휴게·일반음식점을 원거주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양수, 매매, 증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음식점을 상속에 의하여 배우자나 자녀가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7, 00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1.22, 국민신문고)

143) 환경정비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여부

<질의 사항>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인근 부지 (지목: 전)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는 환경정비구역에서 가능한 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정비구역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동일한 행위제한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등)이 적용됨.

2. 이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등을 동반하는 음식점 부설 주차장의 설치 허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44)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증축 관련 질의

<질의 사항>

100 m²의 기존주택 건축물 부지 내 별도의 200 m²의 소매점 건축 가능 여부

<답변 사항>

1.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증축 관련 질의 (기존주택 건축물에서의 별도의 소매점 증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1호 다목 단서규정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서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증축”의 정의 참조.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19.08.13.)

145) 일부 지역만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질의 사항>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분류식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하수 전량을 상수원보호구역 하류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지역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개 자연부락 중 2개 자연부락)에 한하여 총 호수의 20 퍼센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으며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처리하는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20% 범위 내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함.
2. 환경정비구역 중 일부 지역만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46)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총수와 총 호수의 기준

<질의 사항>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총 수와 총 호수의 산정기준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원거주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 경우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은 10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총 수는 동 규정의 각호의 범위 (환경정비구역의 총호수의 비율)를 초과할 수 없음.

2. 이 때 총 수란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개소 수를 의미하며, 총 호수란 환경정비구역 내 총 가구 수를 의미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47)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총 호수 산정의 소수점 이하 계산방법

<질의 사항>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이 총 호수의 5% 가능한 지역에서 용도변경 가능 호수를 산정할 시 소수점 이하의 계산방법은?

<답변 사항>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총 호수를 계산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48) 음식점을 원거주민이 아닌 자가 구입하여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원거주민이 허가를 득하여 기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매매로 인해 원거주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원거주민이 아닌 자가 그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의 라목은 원거주민이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휴게·일반음식점을 매매로 원거주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원거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제한적으로 휴게·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을 고려할 때 휴게·일반음식점을 원거주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양수, 매매, 상속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는 어긋난다고 판단 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9]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민원

149)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공원묘지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용으로 운영 중인 공원묘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지목이 임야인 부지에 벌채 및 성토 등을 통해 주차장 (건축물은 없음)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5호에 따르면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행위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1호에 따르면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은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아닌데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3)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가 가능할 경우, 주차장 (용도변경) 설치 면적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차장 예상 설치 면적 : 8,600 제곱미터 (1부지 3,800 제곱미터 내외, 2부지 4,900 제곱미터 내외)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원묘지에서 지목이 임야인 부지에 벌채 및 성토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형질 변경이 가능한 지, 가능 할 경우 설치면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지목 변경 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6.10.07, 국민신문고)

150)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기반시설 행위허가 시 농림업 여부 확인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기반시설인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 시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업에 종사여부는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농지원부 및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는 1,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 제곱미터 이하는 농지원부 및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가 발급이 안 되는데 이럴 경우, 농지취득 확인서로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농업인의 인정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상 ‘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농업인’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농지원부 등재 대상자 포함)에 의거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업인’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4.19, 국민신문고)

151) 상수원보호구역 제외 관련 질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 '답'으로 밭이 거의 한 필지가 걸려 있습니다.

해당 필지 근처는 제방이 없으며, 바로 옆의 다른 사람 밭과 해당 밭은 고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50 ~ 100 cm 정도).

그러나 해당 부지만 거의 한 필지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걸려 있으며, 바로 옆 부지는 일부 (하천 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상황은 모르겠으나, 현 상태에 이렇게 고저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부 또는 전체 필지가 제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는 상수원의 확보와 지역주민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 상수원 오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 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5.23, 국민신문고)

152)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

<질의 사항>

2016년 6월 2일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치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13년 4월, 소유 토지 (전)에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 조항에 의거 건축물이나 공작물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하여 불허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14년 10월 30일에 규제개혁 대 토론회에 참여하여 위 내용을 건의하였고 16년 6월에 신문고에 질의를 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 다시 문의를 하였으나 태양광의 경우, 이미 형질변경 또는 전용허가를 거친 '잡종지' 등의 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전, 답, 임야에 설치 시에는 절성토와 토목공사 등이 없어도 형질변경 대상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땅의 지목이 '전, 답, 임야'인 상황에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부지에 설치가 가능하게 확대한다 한들, 이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법 개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와 산자부 등에서는 지역주민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농촌 태양광 및 금융지원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법령의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상수원수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입지 및 행위를 금지·제한하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3. 우리 부는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에너지 설비 허용대상을 기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옥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내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답·임야 등의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연환경 훼손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 등의 상수원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7.21, 국민신문고)

153)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유해화학물질 허가 관련

<질의 사항>

당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에서 사용하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변경신고 완료) 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대체물질을 사용해 온 도중에 대체물질이 17년도부터 유해화학물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주어진 유예기간 안에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 기 설립된 공장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해 오던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수도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는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바, 기 사용되어온 대체물질에 대한 상기 조건 부합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여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고시에 명시된 경과 기한 내 영업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9.07, 국민신문고)

154)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주택) 양성화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양성화 가능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세대장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 존재 확인)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주택) 양성화”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련법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정책과, 2017.11.23, 국민신문고)

155) 상수원보호구역 위법사항 (건축물) 단속

<질의 사항>

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 상으로 문의를 하기에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드리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제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3개 시.군.구에 걸쳐 있으며 보호구역내 행위 가능한 행위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허가에 대해서는 3개 시군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보호구역 관리 (단속, 환경기초시설 관리, 쓰레기 수거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위법 건축물 단속 시 고발과 원상회복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같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 (해석)됩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은 인허가권이 없는 상수도본부에서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가와 만약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법 건축물 원상회복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는 수도법에서 사후처리 문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청내의 담당부서는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12.27, 국민신문고)

156)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주 사망으로 인한 건축허가 명의 변경

<질의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연면적 약 195 제곱미터의 건축물 건축주가 사망하였으나, 법정 상속인 (배우자는 사망하였으며, 자녀 3명임) 3인 중 2인은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고 나머지 1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 기간이 약 1개월입니다.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약1개월 거주하는 상속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경우 가능한지, 아니면 상기와 같은 경우도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의 상속”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에 대하여 수도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04.14, 국민신문고)

157)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 설치 가능한지?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가설건축물 형태로 단독주택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령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지목을 대 (垔)로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가설건축물이 오수처리시설이 감면되는 등 일반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권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2020-07-07)

158) 상수원보호지역의 상하수도 요금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대상 상하수도 요금 인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수도는 시설 및 인구규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격차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생산여건이 유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요금 정책에 따라 요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나. 귀하께서 언급하셨듯이 광주시 일부 지역은 상수원 개발 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보상 개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통하여 공과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및 물품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또한 광주시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함으로써 광주시민 분들의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왔으며 맑고 안정적인 수도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수도과, 2020.11.25, 국민신문고)

159) 상수원보호구역 내 형질변경 하여 농가주택 신축

<질의 사항>

현재 지목이 전이고 이것을 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지목 전을 대로 형질변경이 행위허가 대상이어서 변경가능한지 형질변경하여 농가주택신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신축”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垔)인 토지에 가능 “하며, 토지형질변경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5호에 따라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09.28, 국민신문고)

160)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관련 질의

<질의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인 1953년에 건축된 기존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원거주민의 농민으로서 주택이 낡고 노후하여 재건축 하려 하는 바, 본 주택의 토지의 지목은 현실과 다르게 공부장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위 단독주택 건축물을 재건축하려는 바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서 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3.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시는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이어야 하나 위와 같이 기존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2조 가목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가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 (垆)인 토지에 가능 “하며,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동 규칙 제15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신축은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상 “전”에 기 건축된 주택 (정상적으로 등재된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없으나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0.24, 국민신문고)

161)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설치 지목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회관 설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회관 설치 지목은 대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지목이 전이나 밭에도 마을회관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회관은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별법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시 토지의 형질변경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7.11.16, 국민신문고)

162) 농지의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되어, 기존도로와 해당 토지 사이에 위치한 농지 (전)의 일부를 도로로 농지전용 하고자 할 경우 (지목변경)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3호에 따른 소득기반시설의 경우 건축물 개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동규정의 각 목으로 정한 시설용도별 규모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 생산물 저장창고의 경우 농림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는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의 창고면적 (기존 생산물 저장창고 면적 포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으로의 진입도로 행위허가 및 지목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인바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의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와 타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2.07, 국민신문고)

163)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 허가 (지목변경)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산지전용허가 (임야 > 과수원으로의 지목 변경) 신청이 들어왔으며, 2011.3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어 허가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신청지는 토지형질변경이 끝났고 과수원으로 사용 중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례법에 의해 현실 지목 (과수원)으로 변경하고 할 때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상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임야)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질변경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5.29, 국민신문고)

16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해제 등 권한 및 수도정비기본 계획 변경 절차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절차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전제 되어야 하는지?

수도법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수장의 폐쇄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취수장의 폐쇄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권한은 수도법 제67조에 의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어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취수원이며, 수도사업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원의 확보 즉 취수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3.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수도공급이 변경될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4.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관련되는 부분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예: 시설 중복투자, 상수원 확보 등) 관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지자체 간 중재,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부합여부 등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수도정

비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5. 수도법 제4조의 제3항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의 변경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임.

6. 수도법에서는 취수장의 폐쇄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수장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에도 취수장의 폐쇄에 따른 취수원 확보대책 등을 마련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65) 주민지원사업에서의 시·도의 사업 승인 및 직접지원사업 건의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도비의 지원은 없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시·군·구)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수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건의.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수도법에서도 직접지원사업 추가를 건의

수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직접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답변 사항>

1. 수도법 제9조 제1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러한 시·도지사의 승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권한의 일부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의 지역적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도비의 지원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의 하나라고 판단됨.
3. 또한, 한강수계법 시행령은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간접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동법 상의 직접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과 상당부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도법 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법 상 직접지원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수도법에 별도의 직접지원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4.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규제를 받

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원 수질개선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따라서 해당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비의 50% 이상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수도법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한 직접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개별지원사업이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지원 우선순위를 수질오염저감과 관계되는 사업 → 소득증대사업 (개별 지원사업 제외) → 복지증진사업 (개별 지원사업 제외) → 육영사업 → 개별 지원사업 순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66)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소형 선박의 운항이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고 상수원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2.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용하고 있음.
3. 따라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 허용 등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67) 상속과 가업 승계에 따른 원거주민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 부터 그곳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하여 보호구역 밖에서 3년 이상 생활하다가 부친 사망 후 주택과 농지를 상속받아 보호구역에서 농지를 경작하며 사는 자는 원거주민에 해당하는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를 원거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보호구역에 거주한 경우로서 결혼 후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부모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라면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68) 합류식 관거로 정비하여 하수처리 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 폐쇄 없이, 보호구역 내에 산업폐수 배출시설 등 중대한 수질오염원이 없고,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를 합류식 관거로 정비하여 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변경 (해제)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는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보호구역의 변경 (해제)은 지정과 같은 절차 및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귀 시 관할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여부는 귀 기관에서 현장 상황, 상수원의 확보와 주민에 대한 안정적 물 공급, 상수원오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169) 상수원보호구역 어류 조사활동

<질의 사항>

부산 수영강 생태환경네트워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오래 활동을 해 온 사무처장 000입니다. 2018년도 보조금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수영강'의 단위사업 중 '수영강 상류 어류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수영강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어류조사활동을 위해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어류조사활동에 대한 승인을 요청드린 바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에 의거, 보호구역내 어로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는 사항으로서 어류조사활동을 불가함을 알려 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어류조사활동과 어로 행위는 형식적으로 어로 행위는 맞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승낙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 좀 더 해석을 얻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수영강 상류에 서식하는 어류의 현황을 위해 고등부 환경동아리와 저희 단체 회원 몇 분, 어류조사 강사와 고등부 지도교사가 포함된 20명의 사람들이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불법어로행위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어서 거절이 되어야 하는지 해석의 불합리를 생각하며 환경부의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사항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가 동규칙제11조 제2항에 따른 어로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행위허가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9.17, 국민신문고)

< 2부. 한강수계법규 관련 민원 >

[10] 한강수계법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한강수계법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8. 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 리터당 10 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 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 리터당 10 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8. 3.]

170) 한강수계법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① 한 필지에 수변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이 공존할 때 수변구역 행위 제한을 받는지 ② 행위제한을 받을 시 수변구역 해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 필지에 수변구역과 하수처리구역이 공존할 경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에 대해서만 행위 제한 대상이며,

② 수변구역 해제는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수변구역 해제 요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000 (☎000-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한강청 상수원관리과, 2020.06.22, 국민신문고)

171) 한강 수계 수변구역 행위제한 관련 질의

<질의 사항>

한강 수계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사유가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내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커피숍)을 계획할 경
우 식품접객업에 해당하여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건물 내
오수가 오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입될 경우 하천으로 오
폐수가 유입되지 않으므로 상수원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수변구역이더라도 휴게음식점 허가가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인시에서 오수관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제5조에 따라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은 새로이 설치
(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에서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 (BOD)과 부유물질량 (SS)이 각각 10 mg/L 이하로 처리할 경우, 예외
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토지가 수변구역이면서 특별대책지역에 해
당할 경우 식품접객업의 입지는 어렵습니다.

- 다만,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수변구역이 해제되
어 입지가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처
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고 행위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여부, 하수도정비 기본계
획 승인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용인시)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2016.03.16, 국민신문고)

172) 수변구역 내 관광농원 개발사업 가능 여부

<질의 사항>

1. 청도군 운문면 수변구역 내 관광농원 개발사업 허가 신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빠른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일원은 낙동강 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면적 : 22.44 km²)으로 지정되어 있고, 상수원 전용 식수댐이 인접하여, 인근 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수변구역 내 관광농원 개발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 신청면적 : 8,130 m² (관광농원 7,669 m², 진입도로 461 m²)

- 시설내용 : 휴양시설, 오토 캠핑장 25개소, 양어장, 물놀이기구, 사무실, 화장실 매점, 유실수 체험 시설 등

질의 1) 낙동강 수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변구역 행위제한 시설로서 제1호 내지 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의 경우 행위제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만약에 오토 캠핑장을 비롯한 각종 수질오염유발로 우려되는 위 시설이 행위제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입지가 가능하다면, 청도군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상당한 수질오염이 우려됩니다.

질의 2) 대구, 경산, 청도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상수원에 오수정화시설을 비롯한 양어장시설, 물놀이기구, 오토 캠핑장의 입지로 인한 생활오수 등이 배출된다면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되는 바, 환경부 정책이나 예규, 지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수변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변생태벨트 지정고시 지역 등)

<답변 사항>

1. 민원내용은 “수변구역 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행위제한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동강 수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식품접객업, 관광 숙박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용도변경 포함) 등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서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입지여부에 대한 답변이 어렵고, 사업 개발에 수반되는 인·허가사항, 규모, 성격 등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서 입지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 등에 따른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과 자체단체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토지 등의 매수사업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2016.05.02, 국민신문고)

173) 수변구역 내 관광농원 (세부시설) 입지가능 여부

<질의 사항>

1.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1477번지 일원에 농어촌정비법 제 82조 및 83조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봉하리 일대가 낙동강 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관광농원 및 사업계획상 세부시설은 낙동강 수계법 제5조 등에 따른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동시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오염물질이 배출 계획을 수립한 바, 수변구역에서 본 관광농원의 입지 (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관광농원 사업계획

- 위 치 : 청도군 운문면 봉하리 000번지 일원
 - 면 적 : 8,130 m² (부지 : 7,669 m², 진입도로 : 461 m²)
 - 시 설 : 휴양시설 (정자, 물놀이장)
- 체험시설 (양어장 내 관상어 체험, 과실수 식재)
- 편의시설 (오토 캠핑장 25 site, 화장실, 매점)
- 관리시설 (관리사무실, 단독주택)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 없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 5ppm 이하 배출

<답변 사항>

1. 민원내용은 “수변구역 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행위제한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동강 수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식품접객업, 관광

숙박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용도변경 포함) 등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서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입지여부에 대한 답변이 어렵고, 사업 개발에 수반되는 인·허가사항, 규모, 성격 등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관할 인·허가기관에서 입지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 등에 따른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 및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토지 등의 매수사업과 수변생태트 조성사업,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2016.05.09, 국민신문고)

174) 수변구역 행위제한 관련 환경부장관 동의 받는 방법

<질의 사항>

1. 한강수계법 제5조 제3항 후단 단서 조항에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건가요?
2. 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환경부장관 동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한강수계법 제5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는 방법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한강수계법 제5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 등을 통하여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한 것 만으로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여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2017.11.16, 국민신문고)

175)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수변구역

<질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시청 환경과 000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무허가 축사가 있는데 2012년 이전부터 축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수변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수변구역에 있는 축사도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변구역 지정은 2002년에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축사는 2002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변구역 지정 (2002) 전에 있던 현재 수변구역인 축사도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이면서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축사가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무허가로 운영해온 축사라면 적법화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지정 이전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규모로 운영 가능)

(환경부 유역총량과, 2018.03.19, 국민신문고)

176) 옥천리 000번지 등 2필지 선별장 수변구역 위법 여부 및 국수리 000번지 그라운드 골프장 수변구역 위법 여부

<질의 사항>

옥천리 000번지 등 2필지 선별장 수변구역 위법 여부 및 국수리 000번지 그라운드 골프장 수변구역 위법 여부

<답변 사항>

1. 옥천면 선별장이 위치한 지역은 일부는 수변구역이고 일부는 수변구역 외 지역으로 해당 건축물은 용도는 한강수계법 제5조 입지제한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수리 000번지는 수변구역으로 현장확인 결과 인조잔디로 운영하는 그라운드 골프장은 한강수계법 제5조 입지 제한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평군 환경과, 2020.02.18)

177) 수변구역 건축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000 번지에 모텔, 음식점 등 가능 여부
위 번지에 가능한 건축물

<답변 사항>

1.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000 번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관리, 특별대책지역 1권역, 수변구역에 해당됩니다.
2. 수변구역에서는 한강수계법 제5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등)에서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을 행위제한 시설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3. 해당 번지에 가능한 건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불가), 사무소, 소매점이 가능하나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발생오수를 전량 유입처리 할 경우에는 하단의 자격 제외)

(양평군 환경과, 2020.09.16)

[11] 한강수계법 제7조 (토지 등의 매수 등)

한강수계법 제7조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178)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유지 친환경 놀이터 조성 건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주민입니다.

퇴촌면 원당리에는 200명의 학생이 다니는 대안학교와 30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거지인 '나눔의집'이 있습니다. 원당리에는 퇴촌면의 다른 농촌 마을과 달리 많은 어린이들이 거주하고 있고 학교와 나눔의집이 있어 왕래하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당리에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여 놀 수 없는 공간이 없어 늘 안타까워 하다가 최근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는 꿈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그리고 양평군 배정 2리에서 만들어진 생태 놀이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몇몇 마을주민들이 놀이터조성 프로젝트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놀이터 조성이 가능한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조성비용은 마을주민, 학교 학부모들의 힘으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지를 물색하던 차에 원당2리 마을 초입에 있는 환경부 소유 부지(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000번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작나무를 식재하고 로프로 울타리를 쳐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 십년 간 유휴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원당리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대료를 부담할 수도 있고 사용기한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터 조성계획을 파일로 첨부하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부 매수토지 사용허가 가능여부 문의”로 이해되며 요청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요청하신 환경부 소유토지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000번지)는 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한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고대한 (031-790-2572, werber61@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청 상수원관리과, 2017.06.01, 국민신문고)

< 3부.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관련 민원 >

[12]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5조 (오수배출시설)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5조 (오수배출시설)

① 건축연면적 400 m²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m²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I 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I 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 I 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I 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한다.

1. 한강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한강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79)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연면적 합산기준

<질의 사항>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토지에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제5조 제2항 관련)

(2) 해당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다)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질의) 위의 내용에따라 1권역 내에 법인이 5,000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여 연면적 800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본인 (개인)이 5,000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여 연면적 800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 때 건축물규모 합산 여부? 법인대표자와 개인은 동일한사람입니다.

<답변 사항>

1.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 내에 건축물 신축 관련사항으로 이해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드립니다.

2.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제2016-150호)별표 3 제2호에 따라, 법인의 토지와 개인의 토지가 연접하여 오수배출시설 설치 시, 개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접토지에서 동일인의 건축행위로서 그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허용규모를 판단합니다.

3. 또한, 특별대책지역 I 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기준은 필지분할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7.03.28, 국민신문고)

180) 특별대책지역 내 창고시설 설치 여부

<질의 사항>

환경부 고시 제2018-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제2조 (정의) 2항의 “비오수배출시설”이란 함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 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된 우려가 없는 물질들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특별지역 내 신축건물 면적이 소방시설 대상이 되어 건물 내 옥내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단순 의류보관용 창고도 “비오수배출시설”정의에 따른 급수설비 및 상/하수도를 설치 한 경우로 보아 건물연면적 800 m2로 제한되는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창고의 비오수배출시설 적용 여부’로 이해됩니다.

2. 환경부 고시 2018-6호 제2조에 따라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 소방관련 법령에 의하여 급수장치 (옥내소화전)를 설치한 시설은 급수설비 또는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된 시설로 보아 비오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는 동 고시 제5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8.04.26, 국민신문고)

181)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건축 및 개발행위에 따른 문의

<질의 사항>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본인이 2014년도에 남양주시 화도읍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전입하여 (주소지 변동) 거주하고 있다가, 북한강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2017년 초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하여 좀 더 편리한 거주를 가족과 함께 하고자 하여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포함) 및 건축허가를 남양주시 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후 주택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여 2017년 3월 먼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포함)를 남양주시로 부터 허가를 득하였으며 (당시 단독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모든 협의 (환경관련 협의 포함)는 마친 후 허가를 득한 사항임) 그 후 건축허가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남양주시로 이사를 오기 전에 거주하였던 지역 (전 거주지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아님)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제 개인사업을 마무리하고 아내과 함께 남은 여생을 남양주시에 주택을 지어 생활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으로 인해 주소지를 잠시 전에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으며

그리하여 작년 중순부터 잠시 몇 개월 동안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후 개인사업으로 인한 일이 잘 마무리 되어 다시 남양주시로 올해 거주지를 (전입) 옮긴 후 기존에 개발행위를 득한 사항이 있어 바로 건축허가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현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남양주시에서는 판단하여 더 이상의 건축허가 진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인은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닌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업문제 즉 생계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잠시 거주지를 옮겨왔을 뿐인데 환경관련 부서에서 법상 협의를 해 줄 수 없다고만 하니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작년에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허가를 득한 사항인데 잠시나마 주소지 변동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안된다고만 하니... 거주를 6개월 이상 안한 것도 아닌데... 하루 빨리 주택공사를 시작하여 완공 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잘 판단하여 주시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 째 질문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과 아내만 등록되어 있으며 자녀는 세대분가 하여 같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포함함 아내, 자녀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도 같이 나와 있으나 결혼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은 다른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도 포함되어 있으니 앞서 말한 질의와 관련하여 이 곳 지자체에서는 부모님도 같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하시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모님은 엄연히 다른 세대원이시며 다른 거주지에 살고 계신데 이 분들 또한 포함하여 검토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인 즉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환경관련법 상 판단대상을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타나 있는 세대원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판단할 것인지 이것 또한 궁금하여 질의하여 봅니다. 아무쪼록 짧지만 긴 내용으로 본인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 I권역 내 입지제한기준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2.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제2018-6호) 별표 3 제2호 나목 (1)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

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규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특대고시 별표 3 제2호 나목에 명시된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제 거주 여부,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8.07.09, 국민신문고)

182)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인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문의

<질의 사항>

신청인은 2015년 8월 5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 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거주요건에 해당되어 건축 인허가를 받았으며, 2018년 3월 20일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건축 행위는 다른 분이 하고 있으며, 건축내용이 변경되어 2018년 7월 건축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립니다. 신청인은 재외국민이면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거주하면서 건축 인허가를 받았으며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2018년 7월에 민원인은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2018년 3월 20일, 외국으로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출국하여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때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고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은 부동산 취득이나 인허가 등 동등한 법적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6년 8월 19일 최초 건축 인허가 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외국민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인허가가 되었다면, 2018년 7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출입국증명이 가능하다면 1권역 내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 인허가시 실제 거주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대책지역 내 권역 구분, 필지 분할 시점,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어려우나, 제가하신 6개월 거주 제한 등의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I 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3.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제2018-6호) 제5조 제2항 별표 3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여부,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8.07.23, 국민신문고)

183)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입지 문의

<질의 사항>

특별종합대책 고시 5조 2항 별표 3 입지 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필지 소유자로서, 1988년 6월 7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08년 4월 29일 한국전력공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원필지에서 일부 분할 되었습니다.

해당 필지 소유자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항으로 [별표 3] 입지 기준 2항 나목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1997년 9월 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 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 별로 제5조 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지?

분할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의 분할 수용된 사항으로 [별표 3] 입지 기준 2항 가목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0.7.19.) 이전부터 원필지 (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 각 필지 별로 제5조 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에 적용하여 거주제한 없이 오수배출 시설 설치가 허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1988년 6월 2일 이후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개인의 개발목적 및 이익을 창출을 위한 분할 사항이 아니기에 거주제한 적용은 다소 불합리 하다 사료되니 위 작성된 행정규칙 외에 규정 및 행정사례가 있다면 확인하여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입지 관련 질의’ 로 이해 됩니다.

2.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제2018-6호) 별표 3 제2항 나목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 시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별로 제5조 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다만,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0.7.19.) 이전부터 원필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 도로, 댐 건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할인 경우에는 토지분할시점에 따른 거주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며, 인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9.01.31, 국민신문고)

184)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수변구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 기준에 대한 문의

<질의 사항>

토지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000번지

계획관리, 보전관리지역이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수변구역의 토지이며, 공공용으로만 분할 (하천, 도로 등 지자체에서 수용함)되어 있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1990.7.19.) 이전부터 원필지 (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는 토지) 또는 별개의 필지입니다.

신청인 사항 : 전 세대원 특별대책지역 내 실거주 및 주민등록되어 있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따라서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2019-105호) 별표 3 2호의 가목 (1) 각 필지별로 제5조 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라고 하여 첨부도면처럼 보전관리지역에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필지 상 바로 옆 부분 보전관리지역에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 내에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아직 분할이 되지 않았으나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원필지 적용을 받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시점을 분할시점으로 한다 라고 하여 분할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청한 부분은 동일 필지이긴 하나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특대고시 별표 3 다목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특대고시문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을 뿐더러 국토법, 건축법 등도 동일 필지여도 용도지역 혼재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역별 인허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시행 중인데 말입니다.

한편 토지를 용도지역별로 분할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고 나서 계획관리지역으로만 되었을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분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동일필지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어차피 원필지 적용받아 최초 허가받은 허가시점이 분할시점이라면 분할이 되나 안되나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허가를 받고 준공시점에야 토지를 분할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첫 번째 건물 다 짓고 준공을 받아야만 두 번째 건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걸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요지)

원필지상에 보전/계획관리 두가지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차로 보전관리 지역 내에 소매점 허가를 받고 이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매점 허가를 신청할 경우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차 답변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9.09.09, 국민신문고)

185)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수변구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의 분할 시점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하여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 고시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2.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제2018-6호) 제5조 제2항 별표 3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특별대책지역 1 권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특대고시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본인의 미혼의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 다만, 세대원이 학업, 질병요양, 취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 허용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적인 사항은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한 후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에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9.10.10, 국민신문고)

186) 수변구역 건축물의 공동명의 관련

<질의 사항>

1. 공동명의할 경우 한명이 6개월 거주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허가 여부
2. 불가능할 경우 건축허가 변경 후 준공허가 기간에 맞춰서 하는 방법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특대고시 제5조 (오수배출시설) 별표 3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2. 나. 에서 건축허가...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 별로 제5조 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므로 공동명의자 모두 6개월 거주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허가 가능함

2. 해당 번지가 1권역 및 수변구역일 경우 한강수계법 제5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행위제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특대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가능함

(양평군 환경과, 2020.05.12)

[13]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 등)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등)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 재생시설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5. 곡물류 또는 곡물 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 (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187) 특별대책지역에 임목폐기물 재활용처리업 입지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허가를 받아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임야 (산지)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나무뿌리, 가지 등)을 파쇄하여 우드칩을 생산하여 농가나 퇴비공장에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처리 공정도는 임목폐기물 운반 - 사업장에서 파쇄 - 우드칩 (4-7cm) 생산
- 농가 또는 퇴비공장에 납품 최종처리
- 공정상 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있음
- 장비는 운반차량, 파쇄기, 중장비, 보관 장소 (야적/바닥은 콘크리트 포장),
- 사무실

회사 사정으로 위 사업체를 팔당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특대고시 제8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 설치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함.

같은 고시 제8조 제2항 제4호에 규정에 의하면, 폐목재로 숯, 활성탄, 톱밥 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정)은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임목폐기물을 파쇄하여 우드칩 (4-7 cm)을 생산하여 농가 또는 퇴비공장에 납품 처리하는 경우 (폐수는 발생되지 않음) 특별대책지역 1권에서 가능한지 질의 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파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 됩니다.

<답변 사항>

1. 특대고시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 등을 제조하는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에는 예외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우드칩 등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상 폐목재 이외에도 농업 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등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고시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6.07.25, 국민신문고)

188) 고물상의 특별대책지역 입지 여부 관련

<질의 사항>

1. 질의내용

특대고시 제8조에는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함.

고물상의 경우 단순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을 하는 시설이며, 별도의 파쇄, 용융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아 폐수 등은 발생되지 않음.

그러나 OO사업은 특별대책지역에 고물상 (5,378 m²)을 입지하고자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질의 1: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상 어느 시설 또는 업에 해당되는지 질의

2) 질의 2: 고물상이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하여도 되는지 질의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입지 등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가 문의한 고물상이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3.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2019.07.22, 국민신문고)

[14]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11조 (유도선사업 등)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11조 (유도선사업 등)

① I 권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 (증설을 포함한다) 면허·허가·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2.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3.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수상헬기장 및 수상 이착륙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 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사업은 허용한다.

189)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11조 관련 질의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 I 권역 내에 운영 중인 수상레저 사업장의 유선장 위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대책지역 I 권역에는 유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등과 그에 따른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신규 (증설 포함) 하천점용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상레저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선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의 주된 허가사항인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 기존의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유선장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관련법에 따라 신규로 하천점용허가 등을 득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20.05.15, 국민신문고)

190)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수상레저사업에 대하여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운영 중인 수상레저용 계류시설을 수상레저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는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수상비행장 등의 신규 면허·허가·등록 등은 물론 하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위한 신규 하천점용허가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20.12.23, 국민신문고)

[15]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1) 특별대책지역 내 석재의 굴취채취 행위 금지에 대한 질의

<질의 사항>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8-6호) 제13조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굴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석재의 굴취 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하며, 산지의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것은 토사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관리법 상 석재와 토사는 그 의미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석재가 아닌 단순 토사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2. 산지관리법에서는 석재와 토사를 구분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입장에서 토사도 넓은 의미에서 석재의 범주로 보아 특별대책지역 내 산지에서는 단순 토사가 발생하는 개발행위도 불가한 것인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 내 석재의 굴취·채취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2.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8-6호) 제13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써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고시 제13조에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토사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8.11.19, 국민신문고)

192) 특별대책지역 토석채취 허가 관련

<질의 사항>

2004.05.20. 이전 토석의 굴취·채취를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면적 내에서 신규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고자 할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석재의 굴취·채취가 가능한지?

<답변 사항>

1.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2018-6호, 이하 ‘고시’) 부칙 제6조 제2항에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2004.05.20) 허가·신고를 받은 채석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 시행 (2004.05.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04.05.20이전에 채석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사업장의 범위 안에서, 동 시점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면적에 한하여 석재의 굴취·채취가 허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8.05.04.)

193)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제13조 관련

<질의 사항>

환경부 고시 제 2018-6호 제13조 본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본문에 의하면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지로서 해당 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던 중 환경부에서 환경청으로 질의회신을 한 내용을 받았으며 그 회신내용에는 “허용되지 않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범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 같은법 제25조의2 단서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환경부고시 제2018-6호 제13조 본문에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제4호의 석재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제5호에 의하면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정의에 의하여 토석이란 “석재”와 “토사”를 합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4. 상기 3호 내용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환경청에 질의회신한 “허용되지 않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범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 같은법 제25조의2 단서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로 규정하신 것은 산지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정의에 상충되는 것이므로 고시 내용에 부합하는 재정의를 요청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차 답변내용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9.04.03, 국민신문고)

194) 특별대책지역 2권역 산업단지 개발가능 여부

<질의 사항>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지역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가요?

환경부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 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I 권역에 해당될 때, 개발하려는 지역이 농림지역, 계획·생산관리 지역일 경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산업단지 지정·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항으로 이해되며 동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2.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6-150호) 제15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은 제한됩니다.
3. 따라서, 동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 자체가 제한되며,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관련 규정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7.05.10, 국민신문고)

195)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 검토요청

<질의 사항>

저는 이천시에서 작게 버섯배지공장을 운영하고자 제조업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기록되지 않아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되어 민원을 건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이하 “팔당법“이라 기록하겠습니다)

- 팔당법 제 8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1항에서는 팔당법에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6가지를 열거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쌀겨 (미강)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코드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2 3항에 의거 51-19-00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재활용의 유형으로는 R-5-3의 유형으로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 분류 (제4조의2 제2항 관련) 규정 3호 가항의 3)에 규정하기를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관련 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는 농업인이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으로 분류 R-5, R-6 유형으로 분류하고 R-5의 분류는 유무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으로 분류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별표 16을 살펴보면 버섯재배용 배지의 제조, 배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본다면 10호 식물성 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2호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 가목 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목2)의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는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목 3)의 규정은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

은 누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팔당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팔당법 제8조 2항 5호 곡물류 또는 곡물 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66조 2항 (시행규칙) 별표 16에서도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팔당법 제8조 2항 5호에도 규정되지 못하는 마치 출생은 하였는데 어디에도 출생신고는 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법의 취지로 살펴본다면 팔당법에 규정된 범위에서는 먼저 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업 또는 폐수발생 우려가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재활용 신고가 되는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4의2 제3호 가목1)은 비료 같은 가목 2)는 사료 같은 가목 3)은 버섯배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 3)만 누락되어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버섯배지제조 공장은 규정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버섯배지제조에 투입되는 톱밥과 미강 등은 물과 반죽하여 성형된 틀에 따라 원형의 봉지 등에 담아 배양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으로 배지가 만들어지는 관계로 그 어디에도 폐수를 배출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에서 누락되어 누구나 법 앞에서 공평하게 적용되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바라옵건데 관련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으로 사료되오니 적법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주시길 검토부탁 드립니다.

<답변 사항>

1. 해당 질의에 대해선 유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으며,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19.05.20, 국민신문고)

< 4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 >

[16] 한강수계법 제11조 (주민지원사업)

한강수계법 제11조 (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 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 (移住)나 전업 (轉業)에 대한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8. 3.]

196)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직접지원비

<질의 사항>

불편한 점

1. 전용카드의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할 수 없음. 카드 취급을 하지 않는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간 오지 지역 거주민에게는 카드보다는 현금 지급이 편리함.
2. 사용 기간의 단기간 문제: 매년 대체로 지원비가 4월 말 5월 초 통장에 입금되는데, 10월 말이면 벌써 면에서 사용 완료를 독촉하는 전화가 걸려 옴.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에서 차감을 예고하고.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1백만원의 고액을 단기간 내에 물품 구입으로 소진시키라는 것은 상당히 압박이고 불편한 일임.
3. 사용 목적의 제한: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용도 외 사용은 확인해서 차년도 배분액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용도 제한을 두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4. 지급 시기의 문제: 4월 초까지는 지급 완료해주시기 바람

<답변 사항>

1. 전화 안내와 같이, 공과금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지급하는 사후정산 제도가 있으니 교통카드 충전 등 카드 사용이 안되는 경우 영수증을 갖고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카드사용 가능업종을 첨부하니 전용카드 사용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원으로 전환은 관련 법령에 의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역계획과, 2017.10.10, 국민신문고) ==170922... (Check)

197)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질의 사항>

사는 곳 : 충북 충주시 소태면 000

농사짓는 땅 주소지 :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000

사는 곳과 농사짓는 곳은 200m남짓이며, 행정구역상 충청북도와 강원도로 구분되어 있음

(질의요지)

충북 충주시 소태면 00 74년간 아버지께서 거주하시면서 개울 하나 사이 (200m 정도)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000 수변구역 内の 畓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강수계법 시행령에 의거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 (단 사는 곳과 농사짓는 곳이 행정구역상 충북과 강원도로 분리 (개울 하나 사이 200m 정도))

- 74년간 해당지역 실제 거주.

- 이사, 전출, 증여 등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음.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구역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토지 (강원 원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이 아닌 다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충북 충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직접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토지 (강원 원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충북 충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8.01.10.)

198) 축분비료 배부 기준 관련법 요청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한강수계법 제 11조 (주민지원사업)에 의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5조에 의거 해당 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농가에 한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우리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지원팀 (☎ 000-000-00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양평군 친환경농업과 2020.04.13, 국민신문고)

199)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 대상의 범위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금강수계법 제21조 제1항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 개정 (2014.1.28)하였습니다.

- (개정 전)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 (개정 후)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2. 간접지원사업은 규제지역 주민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의미하므로 주민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이 간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입니다.

(금강청 유역계획과, 2020.10.26, 국민신문고)

200) 직접지원사업 대상의 범위

<질의 사항>

직접지원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항>

1. 직접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선정·추진이 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한해 해당지역 일반지원비 4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직접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대상자).
3. 또한 원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대상자의 재산을 상속이나 전부 증여를 받을 경우, 상속이나 전부 증여를 받기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금강청 유역계획과, 2020.10.26, 국민신문고)

201)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

<질의 사항>

주민지원사업비와 다른 사업비를 합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기등기 하여야 하는지, 마을회에서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사항>

1. 금강수계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2.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금강청 유역계획과, 2020.10.26, 국민신문고)

[17]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법 제6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

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6.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

7.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 (당사자 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4. 5. 9.] [제목개정 2014. 7. 28.]

202)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질의 사항>

한강법 제11조 제3항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 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구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같은 시행령 제2호는 ‘비록 구역지정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고,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여 오기는 하였지만,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이고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기 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민’도 보호하겠다는 규정이라고 이해됩니다.

한편, 본 질의자의 경우, 1) 질의자의 모친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오리 000 등 7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들)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며, 2) 한편 000는 2003년 9월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들 중, 대지 1필지와 주택을 1999년 11월에 장남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6필지는 장남을 제외한 비속 5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중 질의자 만이 증여를 받기 전부터 1999년 1월 해당 구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에 해당하며, 나머지 수증자들은 모두 위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라면, 질의자는 실질적으로 위 법 제11조 제3항 및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1) 위 법률 및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위 구역에서 오랜 기간 토지를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질의자의 경우에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2) 한편 위 조항에서 ‘상속’의 경우에는 ‘전부’라는 표현이 없는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전부 증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증여는 재산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수증자 수에 관계 없이 물려줄 수가 있어서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질의자 사안의 경우에는 수증자인 직계 비속 중 오로지 질의자만이 위 거주요건에 해당하므로, 질의자를 지원사업 대상 주민으로 선정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3) 그렇다고 하여 질의자 마저도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면, 직계 존비속간의 생전 증여는 사실상 생전상속의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따라서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는 수증자를 상속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상속의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직계비속 전부가 지원사업대상에 해당하는 반면에 증여의 경우에는 적어도 직계비속 중 1인은 보호해주는 것이 ‘오랜 기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보호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귀 기관에서는 이 법의 입법취지와 질의자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질의자의 경우에 위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주민인지에 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부 증여를 받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에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규정됩니다.

2. 즉, 제2호의 요건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자로, 질의자의 경우와 같이 일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2호의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강청 유역계획과, 2016.03.03, 국민신문고)

203)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대상자 제외 (재상속)에 대하여 검토 요청

<질의 사항>

1. 민원의 요지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했으나 [재상속]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는데,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재상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민원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 (고 000)의 아들입니다.
- 민원인은 2014년 1월에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000에 전입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2014년 2월에 1호의 대상자인 아버지 (고 000)가 돌아가셔서, 첨부의 대상 부동산은 어머니 (고 000)가 상속하였고, 2015년 7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신청인이 상속하고, 2016년도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였다가 재상속이라고 거부 당했습니다.

3. 민원의 이유

- 아버지 사망 당시에 신청인이 바로 상속 받았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상자로 인정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 아버지 >> 신청인은 인정되지만 아버지 >> 어머니 >> 신청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어머니를 거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청인은 형식적으로 어머니로 부터 상속받았지만, 아버지의 상속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거쳐서 새로이 상속권을 가졌다거나, 거주요건 등 새로이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이 [재상속]의 문제를 아버지 사망 당시에 알았다면, 대상 재산의 상속인을 어머니로 하는 것을 재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 이미 수 년째 간암을 앓고 계신 (따라서 오래 못 사실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등기한 이유는 어머니가 상실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기를 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고, 한편으론 어머니의 60년 결혼생활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같은 거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 하는데 따르는 부담이 머지 않아 한 번 더 상속의 문제가 생겨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는 정도라고 판단했고 그 정도 비용이면 감당할만 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속가액이 작고, 1주택이라 다른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어머니를 거쳐서 상속하는데 조세 회피나 절감 등 다른 목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위안의 대가로 신청인이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사망 당시에 신청인이 바로 상속하였을 것이고, 어머니도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결코 동의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 신청인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재상속]이라 할 수 있지만, [재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요건을 구비하거나, 대를 이어서 상속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확장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을 제2호의 대상자로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부 증여를 받고 상속 또는 증여 받기 전에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규정되므로,

2.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상속자의 경우는 주민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6.06.21, 국민신문고)

204)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질의 사항>

1. 질의 배경: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부터 대상 토지 전부를 다수인이 증여 받고 그 중 1명 (당해 지역 거주자)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된 1인의 거주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 내용

① 선정된 1인 만을 대상 토지 전체의 소유자로 보아 나머지 공유자의 면적 전부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단, 공유자 중 1명은 관외 거주자임)

② 상속 또는 증여 시 재상속자의 경우에는 주민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공유관계에 있는 다수인 중 대표자를 변경해도 거주 계속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항>

1. 주민지원사업 원대상자의 대상 토지 전부를 다수인이 증여 받은 경우, 대표자 1명이 대상자 자격만 승계되는 것으로, 대표자 개인 토지만 재산 가치로 인정하여 사업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 (공동재산은 공유자 개별 소유 지분만 인정).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승계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원대상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시에만 1회에 한하여 대상자 승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 공유관계의 다수인 간 대상자 변경 (재승계)은 할 수 없음.

붙임 : 환경부 법률자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관련 질의) 1부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7.06.29)

205)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실거주 요건

<질의 사항>

한강수계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 거주 인정 기준 여부

- 실 거주는 주민등록지가 생활기반으로, 항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인정
- 생계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월 1~2회 주민등록지에서 생활하지만, 취사도구·침구류 등이 존재하여 언제든지 주민등록지에 오면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실거주로 인정

※ 실거주 기준 관련법령이 있을 시, 관련 법령 회신 요망

<답변 사항>

1.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거주에 필요한 취사도구, 가재도구, 침구류 등의 존재 여부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사용료, 신용카드 대중교통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이나, 이·통장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 (거주 의무의 입증자료)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7.09.18)

206)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인정 가능 여부 등

<질의 사항>

가. 2009년 새로운 법 해석 이후 직접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 가능 여부

나. 60㎡ 미만 토지의 범위

다. 증여 취소를 사유로 직접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가능 여부

라. 종중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 토지의 실소유자는 누구인지

<답변 사항>

1. “가”에 대하여

- 한강수계법률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요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2. “나”에 대하여

- 대상자가 소유한 토지 1필지의 전체 면적은 440㎡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편입면적은 3㎡이나 1 필지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2016.6.10)」 <붙임 4의 참고 1>의 대상자별 재산규모 산정시 유의사항 3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 동 토지의 전체면적 반영” 하여 전체 면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3. “다”에 대하여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구역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대상자가 직접지원대상자이며 원대상자의 아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4. “라”에 대하여

- 토지 등의 소유권 판단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 등재 여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등기부 등본상 개인 (공유자 포함) 이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8.04.09)

207)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 대상자 문의

<질의 사항>

1.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하수처리구역인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간접지원사업으로 아파트 지원 가능 여부
2. 아파트에도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이 있으므로 간접지원사업으로 아파트 지원 가능 여부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간접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인 경우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더라도 간접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8.10.17.)

208) 간접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간접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상수원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간접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8.10.17)

209)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여부 (직접지원사업)

<질의 사항>

가. 직접지원대상자 원주민이 사망하면서 배우자가 대상 재산을 상속 받은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나. 상기 자녀가 직접지원비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환수해야 하는지

<답변 사항>

1. 질의 '가'에 대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상속 또는 전부 증여를 받고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에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으로 규정되므로 제2호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상속자의 경우는 주민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직접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 사업비가 지급되었다면 보조금법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직접지원대상 재산의 재상속과 관련하여 기 통보한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유역총량과-309, 2015.2.12)을 붙임과 같이 다시 알려드리니 반환금액 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9.05.23.)

[18]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기타 민원

210) 간접지원사업으로 구매한 농기계의 사용자 범위 등

<질의 사항>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 (공동)를 지원한 경우, 지원 받은 농기계는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범위는?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개정 (2014.1.28 공포)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사람 뿐만 아니라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제11조 제1항)
 -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해당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일반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2.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 3 주민지원사업 종류 중 간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므로, 주민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이 지원대상임
3. “마을”이란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의 거주지역으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을 말함.

(한강청 유역계획과, 2016.04.20)

211) 주민지원사업

<질의 사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12년 전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에 곡물 (벼, 고추) 건조기 설치사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노령화로 벼 농사 농가가 줄어 몇 년 간 사용하지 않아 고장나고 지금은 마을 미관을 해치는 건물로 남고 말았습니다. 곡물건조기 설치 후 보존기간은 몇 년 인지, 보존기간이 지났다면 폐기 처분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의거 내용연수 (곡물건조기: 8년)가 경과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군의 물품처분 및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물품 관리법 등에 준하여 불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처분시 발생한 매각대금은 마을 공동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군에 매각대금의 적정 활용 여부는 사후점검이 필요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 062-410-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청 유역계획과, 2016.04.14, 국민신문고)

212) 주민지원사업의 관리기간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한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제22조 제6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물품 등은 다음과 같이 사후관리기간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토지, 건축물 : 처분시 까지

- 가설 건축물 및 기타시설 : 10년

- 물품 : 「지침」[별표 6]의 물품은 내용연수, 그 외의 물품은 5년

- 다만, 그릇, 도서, 소모성 용품 (청소·주방용품, 토너 등) 및 취득단가 50만원 미만 물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강청 유역계획과, 2020.03.18, 국민신문고)

213)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질의 사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 17조)

가. 사업계획의 수립 기본 방향

3) 읍, 면 단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상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서 읍, 면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취지는 지자체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9.01.18, 국민신문고)

214) 원거주민의 수 차례 주소 변경 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여부

<질의 사항>

주민지원사업 배분기준 중 보호구역 지정 이후 신규전입 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개별지원은 제한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에 정의된 원거주민에게만 개별지원토록 하는 규정인지?

원거주민의 정의 중 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 하였던 자로서 보호구역 내와 외 지역으로 여러 차례 주소변경을 한 경우 적용방안은?

<답변 사항>

1. 주민지원사업의 개별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재산 및 생활상의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보상 차원의 지원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각종 규제를 예상하고 보호구역 내로 전입한 자에게까지 개별지원은 곤란함 (낮은 토지가격 등으로 매입).

2. 원거주민 정의 중 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였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주거한 자로 규정에 있어 3년의 기간은 보호구역 외의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3년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215)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 부터 거주해온 자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 개별지원 대상 포함 여부

<질의 사항>

보호구역 지정 전 부터 보호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의 가족이 보호구역 내에서 생업을 위하여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개별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답변 사항>

1.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보호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의 경우라면 개별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나, 무허가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216) 증여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여부

<질의 사항>

토지 증여자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인지?

<답변 사항>

1. 수도법 제9조 제1항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있어서 증여자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증여자 여부와 상관없이 동법 및 지침 상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
2.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사업 및 지원 대상 선정, 사업 집행 등은 사업시행 주체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217)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적용 시점

<질의 사항>

토지 소유주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배우자의 경우 상속에 따른 지원 사업의 승계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 사항>

1. 사업비 지원대상이 되는 시점은 민법상의 상속시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2. 상속 받은 배우자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그 지위를 승계 받는 것으로 봄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2011.4~2017.4)

218)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축, 증·개축한 경우 주민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축, 증·개축한 경우 계속하여 주민지원대상자에 포함 되도록 건의

- 재산규모는 신축, 증·개축 이전의 건축물 재산가액으로 반영 요청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와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계속 소유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전부 개축 및 신축, 이축의 경우 신규 등기 발생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과 동시에 제한을 받은 동일한 건축물로 볼 수 없고, 기존 건축물의 계속 소유에 대한 단절이 발생되므로 새로운 건축물로 보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건축물과 토지를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건축물을 전부 개축 및 신축, 이축할 경우 건축물의 계속 소유에 대한 주민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계속 소유 요건은 충족되어 토지 소유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19) 직접지원대상자 수변구역 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하였으나, 농어촌공사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 환매되었을 경우 직접지원대상자 인정 여부

<질의 사항>

(질의 1) 직접지원대상자 수변구역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하였으나, 농어촌공사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 환매되었을 경우 직접지원대상자 인정 여부

(질의 2)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2010.3월 매매, 2014.12월 환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경우 직접지원대상자로 인정이 가능하지 여부

<답변 사항>

1. (질의 1에 대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같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요건 중 ‘계속하여 소유’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새롭게 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지침),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이나 양도행위가 없던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3.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에 대해 등기원인 무효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정을 할 경우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0)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직접지원사업비로 정산 가능한지 여부

<질의 사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직접지원사업비로 정산 가능한지 여부.

환경부 유권해석 [유역총량과-1505 (2010.06.16)호] 내용 중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녀의 학자금 영수증을 포함하여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있음’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녀의 의미

<답변 사항>

1. 기 회신한 유권해석의 내용과 같이 한강수계법에 따른 직접지원사업 범위에 학자금 지급이 포함되며, 지원 형태는 대상자의 가구별 지원방식으로 추진됩니다.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부양가족으로 교육, 질병, 취업 등의 사정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대상자의 지원이 없을 시 생활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부양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1) 2009년 새로운 법 해석 이후 직접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 가능 여부 등

<질의 사항>

(질의 1) 2009년 새로운 법 해석 이후 직접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 2) 60㎡ 미만 토지의 범위

(질의 3) 증여 취소를 사유로 직접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가능 여부

(질의 4) 종중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 토지의 실소유자는 누구인지

<답변 사항>

1. (질의 1에 대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요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2. 우리 위원회에서 기 회신 [지역협력과-1106 (2009.06.16.)호]한 바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3. (질의 2에 대하여) 대상자가 소유한 토지 1 필지의 전체 면적은 440㎡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편입면적은 3㎡이나 1 필지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2016.6.10.)」 <붙임 4의 참고 1>의 대상자별 재산규모 산정시 유의사항 3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 동토지의 전체 면적 반영” 하여 전체 면적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3에 대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

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구역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

5. 따라서, 원대상자가 직접지원대상자이며 원대상자의 아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직접지원 대상자에 해당함.

6. (질의 4에 대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 판단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 등재여부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등기부등본 상 개인 (공유자 포함)이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직접지원대상자에 해당함.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2) 상수원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간접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로 볼 수 있으므로,
2. 질의하신 상수원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간접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하수처리구역인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간접지원사업으로 아파트 지원 가능 여부

<질의 사항>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하수처리구역인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간접지원사업으로 아파트 지원 가능 여부

아파트에도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이 있으므로 간접지원사업으로 아파트 지원 가능 여부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경우 간접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로 볼 수 있으므로,
2. 질의하신 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인 경우 하수처리구역에 속하더라도 간접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4)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여부

〈질의 사항〉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여부

〈답변 사항〉

1. 「2016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사업비 누적액이 재산 가치 (시가표준액)의 3배를 초과하면 직접지원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음(공동소유 시 공유자 각각 소유 지분만 인정)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5)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사업비 누적액이 재산가치(시가표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과 관련하여 재산가치(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연도

<질의 사항>

가)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사업비 누적액이 재산 가치 (시가표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과 관련하여 재산가치 (시가 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연도는?

나) 20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 사업비 누적액이 재산 가치 (시가 표준액)의 3배를 초과할 때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다) 초과했을 경우 다음 해부터 직접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라) 대상자로 제외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직접지원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아들이 토지를 상속받았을 때 다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사항>

1. 가)에 대하여. 60㎡ 미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소규모 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함임. 따라서 재산 가치 (시가 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연도는 지원제한 규정이 신설된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나)에 대하여. 20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 사업비 누적액이 재산가치 (시가표준액)의 3배가 될 때까지만 직접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3. 다)에 대하여. 20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 사업비 누적액이 재산 가치 (시가 표준액)의 3배를 초과할 때 부터 직접지원대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4. 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지원 제한 대상은 60㎡ 미만인 토지로서 이는 재산규모에 대한 제한임.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해 2011년부터 지원한 직접지원사업비 누적액이 재산 가치의 3배를 초과한다면 다음 해부터 직접지원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해당 토지를 상속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토지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것이므로 다시 직접지원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6) 마을 공동농기계의 지원대상 및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범위

<질의 사항>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 (공동)를 지원한 경우,

(질의 1) 지원받은 농기계는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한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범위

<답변 사항>

1. 한강수계법 개정 (2014.01.28 공포)을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사람 뿐만 아니라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제11조 제1항)

-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해당 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일반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2. (질의 1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 3 주민지원사업 종류 중 간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임으로, 주민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마을의 모든 주민이 지원대상임

3. (질의 2에 대하여) “마을”이란 주민지원사업 대상 주민의 거주지역으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역을 말함.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227) 주민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설립한 장학회에서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또는 농수산물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사항>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재원으로 설립한 ‘조안면 장학회’에서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초등학교 졸업생 중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 학자금 또는 농수산물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답변 사항>

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에서는 일반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으로 장학기금을 적립·운영할 경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재단설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원으로 하는 장학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조안면 장학회의 「조안면 장학회 회칙」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한강청, 주민지원사업 질의회신집 2018.12)

< 5부. 상수원관리지역 기타 민원 >

228) 축사시설 양성화와 관련하여

<질의 사항>

1.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516호, 2014.3.24.)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2 상황)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우사)은 현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수변구역은 2002. 9.18.에 지정 고시되었고, 아울러 수변구역 내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가축분뇨배출시설 (우사)은 수변구역 지정 전 1995년에 330㎡에 대하여 행정청에 인허가를 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1995~2000년도까지 몇 차례 증축을 통해 660㎡ 규모로 수변구역 지정 전 무허가 증축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이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사 증설 당시는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할 행정청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한 제한구역 지정 고시는 2007.12.31.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질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 가축분뇨배출시설 (우사)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양성화시설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변구역에서의 무허가 추가 양성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가축분뇨법 부칙 <제12516호, 2014.3.24.> 제8~9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축사)이 가축분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의 사육이 금지된 ‘수변구역’에 위치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3. 다만,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 완료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신고된 면적 범위 내에서 가축 사육이 허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2017.01.11, 국민신문고)

229)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처리기준 질의

<질의 사항>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민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은 되나 토지등기상 소유권이 상수원보호구역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도 특례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상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변경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임야)가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형질변경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해당 여부 및 소유권 이전 등 타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2018.03.09, 국민신문고)

230) 오총제 시행일 관련 질의

<질의 사항은 국민신문고에 미수록>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시기”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416호, 2011.5.31.> 제1조(시행일) 제2호에 강원도·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20. 6. 1. 시행하나, 제2조에 시행 후 최초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은 제8조의4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승인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년도 1. 1.부터 2030.12.31.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강원도는 기본계획을 총량제 시행 다음 년도인 2021.1.1.~2030.12.31.까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지역개발사업 협의) 제1항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의 승인·허가일의 기준은 ‘사업준공’이 아니라 ‘사업의 승인·허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당단계에 총량계획의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 할당이 가능하므로, 기본계획 수립 전 총량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의 최초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과 같이 2022.12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2020.4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개발사업은 현행 총량협의 대상은 아니나, 해당 개발부하량은 한강 수계 강원도 1단계 기본계획에 개발계획으로 포함됩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20.04.10, 국민신문고)

231) 특대유역 수질오염총량 건축연면적 관련 질의

<질의 사항>

□ 질의요지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특대유역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은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어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의 특성상,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 동일한 한 필지에 오수배출시설 (공장, 사무소) 건축연면적 790㎡ (A동)와 별동의 비오수 배출시설 (창고, 창고 등) 건축연면적 800㎡ (B동)를 동시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 이러할 경우, 한 필지 전체 건축연면적은 1,590㎡이나 이중 오수배출시설 건축연면적은 800㎡미만이 됩니다.

○ 이 사업이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해당 사업으로 구분되어 할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특대지역에서 오수배출시설과 비오수배출시설의 면적 합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 할당”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호 가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특대지역 건축연면적 산정 시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①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 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③ 토지가 인접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3.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 [비오수배출시설 (창고, 차고 등)이 오수배출시설 (주건축물)의 부대시설 또는 편의시설 등으로 하나의 용도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한 위와 같은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또한, 건축물 용도가 달라서 오수배출시설과 비오수배출시설을 각기 건축할 경우도 같은 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호 나항에 따라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어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총량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20.02.17, 국민신문고)

23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특대 지역 내의 건축연면적 산정 질의

<질의 사항>

○ 입지 대상 건축물 현황

- 1권역 내 연접, 인접 (배우자, 직계존비속) 건축물 없으며, 50m 내 토지 소유도 없음
- 기존 일반음식점을 개축 (기존건축물 규모 이내 132㎡) 및 증축(제2종 근생 사무소 및 단독주택)
- 계획관리지역, 한강수계 수변구역, 하수처리구역이나 오수맨홀 및 배관이 미시공, 오염총량 할당량 (여유량)이 없음

○ 식품접객업 (132㎡)은 개축인데도 불구하고 증축 (제2종 근생사무소 및 단독주택) 건축물을 합산한 연면적으로 산정하여 400㎡ 이상의 특대 유역 입지제한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건축물 용도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용도 (식품접객업, 기타 오수배출시설로 구분)에 따라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식품접객업 400㎡, 일반건축물 800㎡ 미만일 경우 입지가 허용되는지?

○ 또한, 기존 건축물인 음식점의 개축이므로 오염총량 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답변 사항>

1. 귀하의 민원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이하 “특대지역”) 내 식품접객업 포함 건축물 입지 제한 및 오염총량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특대고시 (환경부 고시 제2019-105호, ‘19. 6.13) 규정에 따라 특대지역 I 권역에서 식품접객업·숙박업과 기타 오수배출시설이 함께 설치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숙박업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400㎡ 이상일 경우 입지가 제한됩니다.

2. 또한, 해당지역이 수변구역일 경우 같은 고시 제5조 제6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범위 내 오수배출시설 입지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지제한이 유지됩니다.

3. 아울러,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440호, '19.12.27) 제27조 제2호 나항 (소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인·허가시 시행청 (지자체)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20.05.15.)